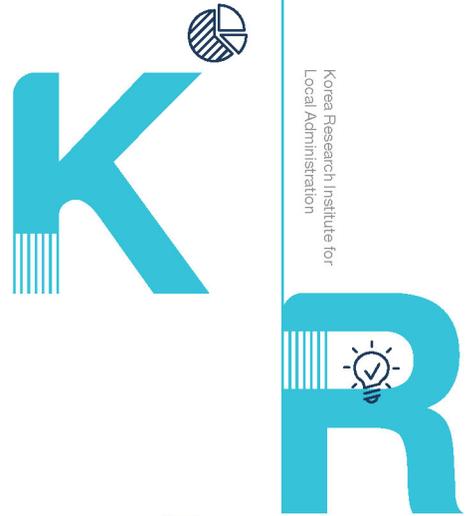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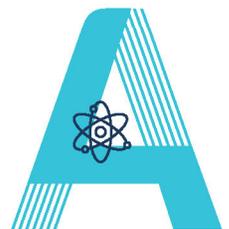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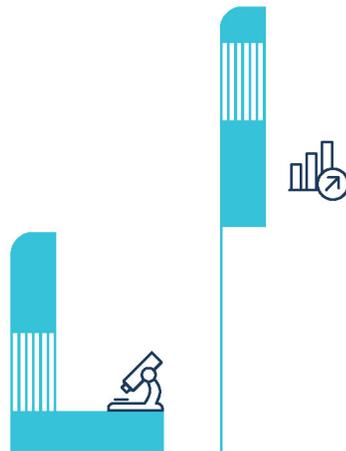


지자체 사회적경제 측정·관리지표 개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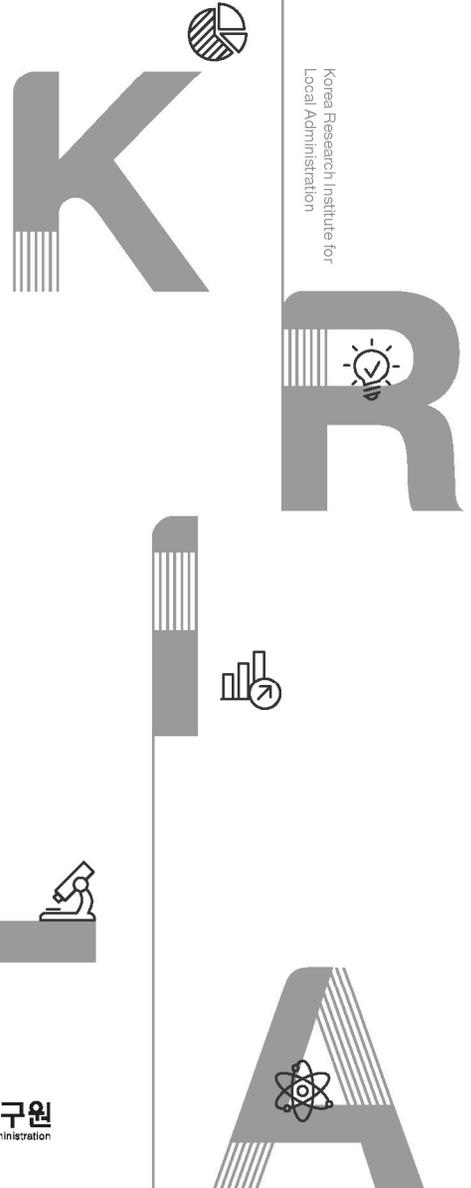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자체연구 2020-7 |

지자체 사회적경제 측정·관리지표 개발 연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박 승 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 상 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여 효 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최근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 필요
-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내의 선순환 경제 시스템 활성화의 토대 역할에 대한 의미 탐색
- 사회적경제변화에 대한 사후적인 효과 제고 분석틀 제고 필요
-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찰 필요

□ 연구목적

-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황 파악
- 사회적경제 지표 설정 방향성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적경제 개념 정리 및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사회적경제기업 설문조사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 설정 및 성과 파악
- 사회적경제 지표 설정 방향성 제시

- 주요 대안을 설정하여 사회적경제 방향성 도출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설정

3. 주요 연구결과

-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 도출
 - 사회적 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평균 점수는 3.81점인 것으로 확인
 - ‘일자리 창출 인건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40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점으로 확인
 - ‘사업개발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2점으로 확인
 - ‘금융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4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으로 확인
 - ‘세제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3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7점으로 확인
- 사회적기업 필요사항
 - ‘직업능력 교육훈련’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점으로 확인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0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73점으로 확인
 - ‘판로개척’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52점으로 확인
 - ‘네트워크 구축’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5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4점으로 확인
- 향후 필요한 지원 필요성

- ‘일자리 창출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28점으로 필요성 확인
 - ‘전문인력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22점으로 필요성 확인
 -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3.74점으로 필요성 확인
 -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08점으로 필요성 확인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03점으로 필요성 확인
-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했을 때,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일자리 창출 인건비’(36.5%)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가 동일하게 13.5%로 많은 것으로 확인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방향
- 경제적 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의 창출을 고려해야 함
 - 마을기업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며,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이 지역유형별 특화사업을 개발 또는 발굴하여 지자체 및 민간위탁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일자리와 연계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의 특성이외에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측정도 경제적 성과를 제외하고 사회적 성과와 혁신 성과로 나누어 측정

4. 사회적경제 측정 기준 및 지표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설정 기준
 - (효과성) 정부 후반기를 맞아 각 자치단체도 그간 추진해온 국정 주요시책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
 - (대표성) 평가 결과와 각 지역이 창출한 국정성과 간 차이가 없도록 국정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공정성·수용성)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여건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평가지표 설계 시 지역 특성을 고려
 - (특수상황 고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변화한 중앙부처의 정책목표와 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주요시책을 함께 고려한 지표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성과측정 지표 개발
 - 정량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애로 해소 조례 제정

지표명 설명	① 사회적경제 운영 과제 중 중앙부처 중점과제로 선정된 과제 및 개선 실적 ②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타 혁신 건의과제 중 행안부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된 과제 및 개선 실적	
산식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애로 해소건
	세부 산식	실적건수(선정건수 + 해결건수)

- 정량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표명 설명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	
산식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수 대비 취업자수
	세부 산식	전년대비 증가

- 정성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견인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우수사례	
지표명 설명	지자체가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 우수사례를 창출한 실적
산식	지자체 자율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 우수사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조례·규칙, 예규·지침·고시 등)를 제·개정(정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성장과 연계한 사례 중 우수사례 1건

- 정성지표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 우수사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우수사례	
지표명 설명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지원 시책 중 구체적인 성과를 낸 사례 발굴
산식	지자체 자율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지원 우수사례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분석틀	6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7
제1절 사회적경제 개념	9
제2절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11
1. 사회적기업	11
2. 마을기업	12
3. 자활근로사업	13
4. 협동조합	14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설문조사	15
제1절 조사 개요	17
1. 기본 사항	17
2. 응답자 특성	18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21
1.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및 만족도	21

제4장 성과지표 개발(안)	59
제1절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방향	61
제2절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안)	68
1. 측정 지표 구성 및 의의	68
2. 성과측정 지표 등록(안) 및 체크리스트	70
3. 사회적경제기업 성과측정 지표	73
제5장 정책방안 및 성과지표	77
제1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79
제2절 관리방안	88
1. 중앙의 역할	88
2. 민간의 역할	90
3.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93
【참고문헌】	99
【부록】	101

CONTENTS

표목차	〈표 3-1〉 조사 개요	17
	〈표 3-2〉 조사 내용	18
	〈표 3-3〉 응답자 특성	19
	〈표 3-4〉 사회적 공헌활동 만족도	21
	〈표 3-5〉 회사 발전단계 인식	22
	〈표 3-6〉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만족도	24
	〈표 3-7〉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만족도	25
	〈표 3-8〉 사업개발비 지원 만족도	26
	〈표 3-9〉 금융지원 만족도	27
	〈표 3-10〉 사회보험 지원 만족도	28
	〈표 3-11〉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지원 만족도	29
	〈표 3-12〉 세제지원 만족도	30
	〈표 3-13〉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	31
	〈표 3-14〉 직원능력 교육훈련 지원 만족도	32
	〈표 3-15〉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만족도	33
	〈표 3-16〉 판로개척 지원 만족도	34
	〈표 3-17〉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만족도	35
	〈표 3-18〉 일자리 창출 인건비 필요성	36
	〈표 3-19〉 전문인력 인건비 필요성	37
	〈표 3-20〉 사업개발비 필요성	38
	〈표 3-21〉 금융지원 필요성	39
	〈표 3-22〉 사회보험 지원 필요성	40
	〈표 3-23〉 시설 및 운영비 대부	41
	〈표 3-24〉 세제지원 필요성	42
	〈표 3-25〉 경영컨설팅 필요성	43
	〈표 3-26〉 직원능력 교육훈련	44

〈표 3-27〉 공공기관 우선구매	45
〈표 3-28〉 판로개척 필요성	46
〈표 3-29〉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47
〈표 3-30〉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1순위	48
〈표 3-31〉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2순위	50
〈표 3-32〉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사회적 기업)	51
〈표 3-33〉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마을 기업)	52
〈표 3-34〉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자활 기업)	53
〈표 3-35〉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사회적 협동조합)	54
〈표 3-36〉 성과측정 지표 의견(사회적 기업)	55
〈표 3-37〉 성과측정 지표 의견(마을 기업)	56
〈표 3-38〉 성과측정 지표 의견(자활 기업)	56
〈표 3-39〉 성과측정 지표 의견(사회적 협동조합)	57
〈표 4-1〉 지표등록표 (안)	70
〈표 4-2〉 지표 일반 체크리스트	71
〈표 4-3〉 지표 중점 심의사항	71
〈표 4-4〉 사회적경제기업 정량지표(안)	73
〈표 4-5〉 사회적경제기업 정량지표(안)	74
〈표 4-6〉 사회적경제기업 정성지표(안)	75
〈표 4-7〉 사회적경제기업 정성지표(안)	76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분석틀

제1장

연구개요

KRILA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정과제-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할 수 있는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정과제-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국정과제-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과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통한 만족도 증대
 - [국정과제-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 주민참여의 확대

-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국정과제-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2.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 필요**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2050년 역삼각형 모양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박승규, 2018)
 - 전체 평균 수명은 1960년 60세, 1980년대 말 70세, 2007년 79.6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변화는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발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을 지역내에서 주체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 확충이 필요
 - 또한, 지역의 생산을 변화시키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었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호연계를 통하여 사전 및 사후적인 관점에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현황, 평가틀, 평가가 필요
- 사회적경제의 방향성 탐색 필요**
 -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찰 필요

- 초기 고용부 주도의 환경, 생태, 경제, 생활 등 사회적기업의 전형적인 틀에서 다부처, 성별, 분야별, 특성별,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영 필요
 - 더불어, 초기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인증 위주의 1차적인 양적 확대 방식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2차적인 질적 확대 방식으로 전환됨
 -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민의 참여가 유도되는 3차적 지역특성에 맞는 확장된 의미의 질적 확대 방식이 필요
-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내의 선순환 경제 시스템 활성화의 토대 역할에 대한 의미 탐색**
-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경제내 주민발의 자발적인 경영체 역할과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중앙의 역할 고려 필요
- **사회적경제변화에 대한 사후적인 효과 제고 분석틀 제고 필요**
- 기존 사회적경제에 의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가 지역 및 국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제시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황 외에 지역별/유형별 사회적경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게 진행(박승규, 2017)
 -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정책 대안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

3. 연구의 목적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황 파악

- 사회적경제의 유형 구분
- 지역에서의 유리한 사회적경제과 현재 사회적경제과의 미스매치 분석

사회적경제 지표 설정 방향성 제시

- 주요 대안을 설정하여 사회적경제 방향성 도출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설정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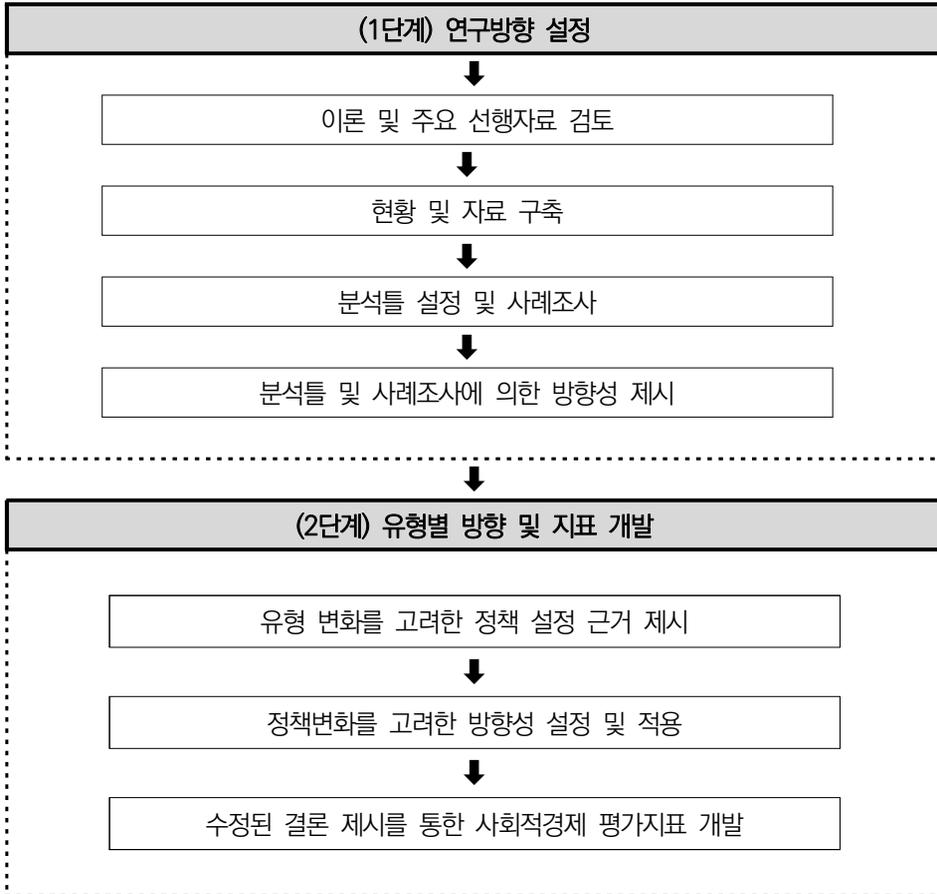
1. 연구범위

- 기본적으로 16개 시도(세종 제외)로 구성
 - 16개 시도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며, 정책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

2. 연구방법

- 기본 연구방법
 - 모든 연구는 현황 파악을 통한 지표 설정으로 구성
- 정책현황분석
 - 주요 사회적경제의 유형에 대한 정책 현황 분석
 - 현재 정부에서 운용중인 정책 현황을 제시
- 사회적경제의 방향성 근거 확보
 - 현재 사회적경제의 특성 비교
 - 개별 사회적경제의 기여 정도(지역 맞춤형)
 - 사회적경제간 융합성(상호 보완성)
- 수정된 사회적경제의 운영방향을 고려한 지표 제시
 - 기존 정책 설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수정된 사회적경제 운영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및 시군구 사회적경제 운영 및 성과 파악을 위한 지표 설정

제3절 연구분석틀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제1절 사회적경제 개념

제2절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KRILA

제1절 사회적경제 개념

□ 사회적경제 정의

- M. Mendell은 사회적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
 - 사회적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립적 경제로, 민주적 발전, 삶의 형평성, 잘사는 사회의 달성이라는 목적과 일정한 제도적 양식을 가진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음(김용문, 2014)
 - 사회적경제 = 사회 + 경제
 - 사회 : 민주적 발전, 삶의 형평성, 잘사는 사회를 위한 기여
 - 경제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립적 경제
- OECD는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를 충족해야 사회적경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세종시, 2018)

□ 사회적경제는 계층화된 수직적 관계의 재분배 원리로 생산-분배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의 상호성(호혜) 원리를 통해 생산-분배가 확보되는 경제적 통합양식으로 파악(황영모, 2018)

- 구체적으로 물질적 재화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재화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경제 영역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권리·자산을 지키는 방법에서 재화를 ‘평가-생산-분배’를 결정하는 경제적 통합양식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황영모, 2018)
-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창안해가는 하나의 영구적인 흐름으로 ‘시장교환, 국가개입, 연대와 상호성’에 의해 추진되는 사회운동에 기반한 집합적 시민섹터를 결합(황영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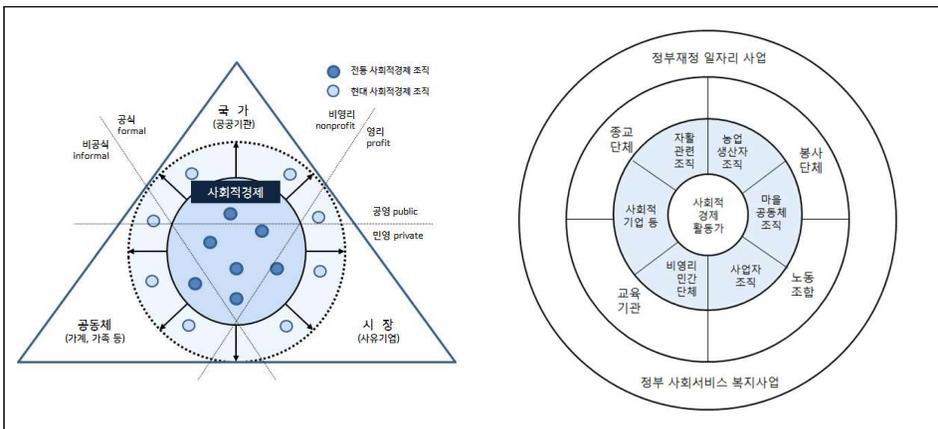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 원칙강령에 의한 정의

- 개인중심으로 자본을 초월하는 사회적 목적
- 자유롭고 민주적인 관리
- 이용자의 이익 / 또는 공익(公益)과의 결합
- 연대와 책임의 원칙의 지지와 적용
- 자율적 경영과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적 발전목적,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익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참여자와 효과를 널리 확대하면서 학술적·법률적 개념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정의(황영모, 2019)

- 현대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금까지의 개념과 활동영역을 벗어나 확장되고 있는 추세

[그림 2-1] 사회적경제 영역 및 조직형태



제2절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Spreckley가 1981년에 사회적 회계(social audit)를 사용하는 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으며(Spreckley, 1981), 유럽의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장원봉, 2009)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조망하는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비영리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이윤배분의 제한을 강조(김봉화 & 김재호, 2010)
-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근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Spreckley(1981)에 의해서 사용된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인 근원은 ‘제3섹터’,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특성, 시민사회의 역량 및 작동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어떤 사회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조직을 하며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기업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김정원, 2009)
-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럽의 최초 연구는 유럽연합의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네트워크’에서 시작
- 고용노동부는 2007년 1월 13일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시행함(김용문, 2018)
 -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함

2.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도·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는 의지와 둘째, 그간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 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을 초래했다는 결과에 의해 시행(주승용, 2014)
 -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행정에서는 간접적인 지원만을 시행하며,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와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을 추구(김재현, 2013)
- 마을기업은 2009년 12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시범 도입한 ‘커뮤니티 비즈니스(2010년 6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근거
 -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명으로 2010년에 시범 도입한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의 시작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 초기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목표 역시 현재의 마을기업과 동일하게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
 - 첫째,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둘째,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회적기업에 비해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성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개발 측면이 강함(세종시, 2018)

- 마을기업은 법적 근거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보다 법적 근거는 약함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법인체 전환 시 마을공동체 임의조직으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체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김용문, 2017)

3. 자활근로사업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기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자활기업(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세종시, 2018)
- IMF 사태 이후의 실직빈곤층 양산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생산적 복지의 정책 수단으로 등장한 자활사업은 제3섹터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건인 ‘자활공동체’라는 근로빈곤층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정착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비취업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공동체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킨다는 단선적인 목표를 설정(정아윤, 2008)
 - 저소득층에게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가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단계 프로그램인 자활근로사업과 기술능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창업한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구성(세종시, 2018)
- 자활공동체 사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하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김정은, 2010)

4.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동법에선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함
 -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서 조직한 사업체로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세종시, 2018)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어 다양한 분야의 비공식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동조합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고 사업을 수행
- 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 가능
 - 기본법 시행 이후 신생 협동조합 설립 증가
 - 과거 자생적 협동조합의 전환으로 수요 증가
 - 한국경제의 자영업 과잉, 고용부진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이 신생협동조합의 다수 차지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양미선, 2018)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설문조사

KRILA

제1절

조사 개요

1. 기본 사항

 조사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 설정 및 성과 파악에 활용하고자 함

 조사 개요

-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전화 독려)
응답자 수	74명
조사기간	2020년 10월 19일 ~ 10월 27일
조사기관	(주)한국정책리서치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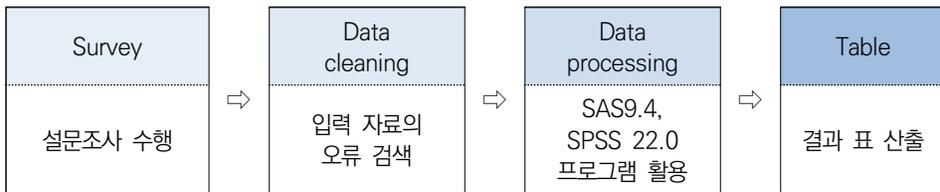
- 설문조사 내용은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이용 현황, 주민의 요구로 구성됨

〈표 3-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문항수 (총 32문항)
기업관련 정보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업종, 소재지	3
성과 및 만족도	사회적 공헌 활동 만족도, 현재 발전 단계, 지원받은 정책 및 만족도, 향후 필요한 정부지원, 필요한 지원사항 우선순위, 올해 사회공헌 활동 목표, 성과측정지표 의견	29

□ 자료처리 및 분석

-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Data Cleaning의 과정을 거친 후 자료처리를 실시하였고,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2.0임
- 자료 분석은 기초통계량 분석 및 교차분석을 사용함



2. 응답자 특성

□ 설문 참여자 현황

- 응답자 특성 확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는 ‘사회적 기업’ 21명 (28.8%), ‘마을기업’ 8명(11.0%), ‘자활기업’ 27명(37.0%), ‘사회적협동조합’ 17명(23.3%)이 조사에 응답함

- 업종별로는 ‘청소·위생·경비’ 13명(17.8%), ‘물품·식품제조·가공·판매’ 12명(16.4%), ‘주거복지·건축·조경’ 6명(8.2%), ‘보육·돌봄’ 6명(8.2%), ‘급식·간식·반찬·도시락’ 6명(8.2%), ‘문화·예술·관광·운동’ 4명(5.5%), ‘교육’ 4명(5.5%), ‘운송·택배’ 4명(5.5%), ‘환경·재활용’ 2명(2.7%), ‘간병가사·요양’ 2명(2.7%), ‘보건·의료·재활치료’ 2명(2.7%)이 응답함
- 사업장 소재지별로는 ‘서울’ 10명(13.7%), ‘부산’ 5명(6.8%), ‘대구’ 3명(4.1%), ‘인천’ 4명(5.5%), ‘대전’ 3명(4.1%), ‘울산’ 3명(4.1%), ‘세종’ 4명(5.5%), ‘경기’ 14명(19.2%), ‘강원’ 6명(8.2%), ‘충북’ 1명(1.4%), ‘충남’ 2명(2.7%), ‘전북’ 4명(5.5%), ‘전남’ 4명(5.5%), ‘경북’ 7명(9.6%), ‘경남’ 2명(2.7%), ‘제주’ 1명(1.4%)이 응답함

〈표 3-3〉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구성		응답	비율
전체		74	100.0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① 사회적 기업	21	28.8
	② 마을기업	8	11.0
	③ 자활기업	27	37.0
	④ 사회적협동조합	17	23.3
업종	① 환경·재활용	2	2.7
	② 문화·예술·관광·운동	4	5.5
	③ 급식·간식·반찬·도시락	6	8.2
	④ 간병가사·요양	2	2.7
	⑤ 교육	4	5.5
	⑥ 보육·돌봄	6	8.2
	⑦ 보건·의료·재활치료	2	2.7
	⑨ 물품·식품 제조·가공·판매	12	16.4
	⑩ 청소·위생·경비	13	17.8
	⑪ 운송·택배	4	5.5
	⑫ 주거복지·건축·조경	6	8.2
	⑬ 기타	12	16.4

구성		응답	비율
전체		74	100.0
사업장 소재지	① 서울	10	13.7
	② 부산	5	6.8
	③ 대구	3	4.1
	④ 인천	4	5.5
	⑤ 광주	0	0.0
	⑥ 대전	3	4.1
	⑦ 울산	3	4.1
	⑧ 세종	4	5.5
	⑨ 경기	14	19.2
	⑩ 강원	6	8.2
	⑪ 충북	1	1.4
	⑫ 충남	2	2.7
	⑬ 전북	4	5.5
	⑭ 전남	4	5.5
	⑮ 경북	7	9.6
	⑯ 경남	2	2.7
	⑰ 제주	1	1.4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1.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및 만족도

1) 사회적 공헌활동 만족도

- 사회적 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평균 점수는 3.81점인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 공헌활동의 만족도는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4.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응답자가 3개 이하인 지역을 제외하고 ‘전북’ 지역에서 4.7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3-4〉 사회적 공헌활동 만족도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전체		74	29.7	32.4	29.7	5.4	2.7	3.81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28.6	42.9	23.8	4.8	0.0	3.95
	마을기업	9	33.3	0.0	66.7	0.0	0.0	3.67
	자활기업	27	22.2	25.9	33.3	11.1	7.4	3.44
	사회적협동조합	17	41.2	47.1	11.8	0.0	0.0	4.29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20.0	40.0	30.0	10.0	0.0	3.70
	부산	5	60.0	40.0	0.0	0.0	0.0	4.60
	대구	3	0.0	66.7	33.3	0.0	0.0	3.67
	인천	4	25.0	25.0	50.0	0.0	0.0	3.7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33.3	66.7	0.0	0.0	3.33
	울산	3	33.3	0.0	33.3	33.3	0.0	3.33
	세종	4	25.0	25.0	50.0	0.0	0.0	3.75
경기	14	42.9	28.6	21.4	0.0	7.1	4.00	

구성	응답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강원	6	16.7	33.3	16.7	16.7	16.7	3.17
충북	1	0.0	0.0	100.0	0.0	0.0	3.00
충남	2	0.0	100.0	0.0	0.0	0.0	4.00
전북	4	75.0	25.0	0.0	0.0	0.0	4.75
전남	4	0.0	50.0	50.0	0.0	0.0	3.50
경북	7	42.9	14.3	28.6	14.3	0.0	3.86
경남	3	33.3	0.0	66.7	0.0	0.0	3.67
제주	1	0.0	100.0	0.0	0.0	0.0	4.00

2) 회사 발전단계 인식

- 회사 발전단계 인식에 대한 문의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힘들다’ 의견이 4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이미 자립한 상태이다’(32.4%) 순의 응답을 보임

〈표 3-5〉 회사 발전단계 인식

(Base: 전체, n=74, Unit: 명, %)

구성	응답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하기 힘들다	단기간 내(1~3년 내) 자립 가능하다	이미 자립한 상태이다	
전체	74	41.9	25.7	32.4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42.9	23.8	33.3
	마을기업	9	11.1	44.4	44.4
	자활기업	27	55.6	14.8	29.6
	사회적협동조합	17	35.3	35.3	29.4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50.0	20.0	30.0
	부산	5	20.0	20.0	60.0
	대구	3	0.0	33.3	66.7
	인천	4	0.0	100.0	0.0

구성	응답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하기 힘들다	단기간 내(1~3년 내) 자립 가능하다	이미 자립한 상태이다
광주	0	0.0	0.0	0.0
대전	3	66.7	33.3	0.0
울산	3	66.7	0.0	33.3
세종	4	25.0	50.0	25.0
경기	14	57.1	21.4	21.4
강원	6	50.0	16.7	33.3
충북	1	0.0	100.0	0.0
충남	2	50.0	0.0	50.0
전북	4	0.0	50.0	50.0
전남	4	50.0	0.0	50.0
경북	7	71.4	0.0	28.6
경남	3	33.3	33.3	33.3
제주	1	0.0	0.0	100.0

3)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정부 정책 만족도

일자리 창출 인건비

- '일자리 창출 인건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40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4.11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4.33점으로 가장 높음

〈표 3-6〉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40,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40	5.0	17.5	20.0	37.5	20.0	3.50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9	0.0	11.1	0.0	55.6	33.3	4.11
	마을기업	5	0.0	20.0	40.0	40.0	0.0	3.20
	자활기업	16	12.5	12.5	25.0	37.5	12.5	3.25
	사회적협동조합	10	0.0	30.0	20.0	20.0	30.0	3.50
사업장 소재지	서울	7	0.0	28.6	14.3	57.1	0.0	3.29
	부산	1	0.0	0.0	100.0	0.0	0.0	3.00
	대구	0	0.0	0.0	0.0	0.0	0.0	-
	인천	3	0.0	66.7	0.0	0.0	33.3	3.00
	광주	0	0.0	0.0	0.0	0.0	0.0	-
	대전	3	0.0	0.0	0.0	66.7	33.3	4.33
	울산	2	0.0	0.0	0.0	100.0	0.0	4.00
	세종	4	0.0	0.0	0.0	75.0	25.0	4.25
	경기	11	0.0	27.3	36.4	18.2	18.2	3.27
	강원	3	33.3	0.0	0.0	0.0	66.7	3.67
	충북	0	0.0	0.0	0.0	0.0	0.0	-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0	0.0	0.0	0.0	0.0	0.0	-
	전남	0	0.0	0.0	0.0	0.0	0.0	-
	경북	2	50.0	0.0	0.0	0.0	50.0	3.00
	경남	2	0.0	0.0	50.0	50.0	0.0	3.50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전문인력 인건비

- '전문인력 인건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3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7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4.56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울산'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5점으로 가장 높음

〈표 3-7〉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3,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3	13.0	13.0	17.4	17.4	39.1	3.57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9	0.0	0.0	11.1	22.2	66.7	4.56
	마을기업	2	50.0	50.0	0.0	0.0	0.0	1.50
	자활기업	6	16.7	16.7	33.3	16.7	16.7	3.00
	사회적협동조합	6	16.7	16.7	16.7	16.7	33.3	3.33
사업장 소재지	서울	2	0.0	0.0	50.0	50.0	0.0	3.50
	부산	1	0.0	100.0	0.0	0.0	0.0	2.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3	66.7	0.0	0.0	33.3	0.0	2.0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2	0.0	0.0	50.0	0.0	50.0	4.00
	울산	2	0.0	0.0	0.0	0.0	100.0	5.00
	세종	3	0.0	0.0	0.0	66.7	33.3	4.33
	경기	7	0.0	14.3	28.6	0.0	57.1	4.00
	강원	2	50.0	0.0	0.0	0.0	50.0	3.00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0	0.0	0.0	0.0	0.0	0.0	
	전북	0	0.0	0.0	0.0	0.0	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1	0.0	100.0	0.0	0.0	0.0	2.00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 사업개발비

- '사업개발비'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52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4.4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울산'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음

〈표 3-8〉 사업개발비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9,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9	6.9	20.7	20.7	17.2	34.5	3.52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10	0.0	10.0	0.0	30.0	60.0	4.40
	마을기업	4	0.0	50.0	25.0	25.0	0.0	2.75
	자활기업	7	14.3	28.6	42.9	14.3	0.0	2.57
	사회적협동조합	8	12.5	12.5	25.0	0.0	50.0	3.63
사업장 소재지	서울	2	0.0	0.0	50.0	50.0	0.0	3.50
	부산	1	0.0	100.0	0.0	0.0	0.0	2.00
	대구	0	0.0	0.0	0.0	0.0	0.0	.
	인천	3	33.3	33.3	0.0	0.0	33.3	2.67
	광주	0	0.0	0.0	0.0	0.0	0.0	.
	대전	3	0.0	0.0	33.3	0.0	66.7	4.33
	울산	2	0.0	0.0	0.0	50.0	50.0	4.50
	세종	3	0.0	0.0	0.0	66.7	33.3	4.33
	경기	7	0.0	28.6	28.6	0.0	42.9	3.57
	강원	2	50.0	0.0	0.0	0.0	50.0	3.00
	충북	0	0.0	0.0	0.0	0.0	0.0	.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1	0.0	0.0	0.0	0.0	100.0	5.00
	전남	0	0.0	0.0	0.0	0.0	0.0	.
	경북	2	0.0	100.0	0.0	0.0	0.0	2.00
	경남	2	0.0	0.0	50.0	50.0	0.0	3.50
제주	0	0.0	0.0	0.0	0.0	0.0	.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4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3.14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강원'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67점으로 가장 높음

〈표 3-9〉 금융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4	25.0	12.5	37.5	4.2	20.8	2.83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7	28.6	0.0	28.6	14.3	28.6	3.14
	마을기업	3	66.7	0.0	0.0	0.0	33.3	2.33
	자활기업	8	12.5	12.5	62.5	0.0	12.5	2.88
	사회적협동조합	6	16.7	33.3	33.3	0.0	16.7	2.67
사업장 소재지	서울	5	0.0	20.0	60.0	20.0	0.0	3.00
	부산	1	100.0	0.0	0.0	0.0	0.0	1.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2	100.0	0.0	0.0	0.0	0.0	1.0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2	0.0	0.0	100.0	0.0	0.0	3.00
	울산	1	0.0	0.0	100.0	0.0	0.0	3.00
	세종	1	100.0	0.0	0.0	0.0	0.0	1.00
	경기	4	25.0	25.0	25.0	0.0	25.0	2.75
	강원	3	33.3	0.0	0.0	0.0	66.7	3.67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1	0.0	0.0	0.0	0.0	100.0	5.00
	전남	1	0.0	0.0	0.0	0.0	100.0	5.00
	경북	2	0.0	50.0	50.0	0.0	0.0	2.50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 사회보험 지원

- '사회보험 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7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65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4.08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세종'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0〉 사회보험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37,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7	5.4	21.6	18.9	10.8	43.2	3.65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12	8.3	8.3	8.3	16.7	58.3	4.08
	마을기업	4	0.0	50.0	50.0	0.0	0.0	2.50
	자활기업	12	8.3	25.0	25.0	8.3	33.3	3.33
	사회적협동조합	9	0.0	22.2	11.1	11.1	55.6	4.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6	0.0	16.7	16.7	33.3	33.3	3.83
	부산	2	0.0	0.0	50.0	0.0	50.0	4.00
	대구	1	0.0	0.0	0.0	0.0	100.0	5.00
	인천	4	0.0	75.0	0.0	0.0	25.0	2.7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33.3	0.0	66.7	4.33
	울산	2	0.0	0.0	50.0	0.0	50.0	4.00
	세종	2	0.0	0.0	0.0	50.0	50.0	4.50
	경기	9	11.1	22.2	22.2	0.0	44.4	3.44
	강원	3	33.3	0.0	0.0	0.0	66.7	3.67
	충북	1	0.0	0.0	0.0	0.0	100.0	5.00
	충남	1	0.0	0.0	0.0	100.0	0.0	4.00
	전북	0	0.0	0.0	0.0	0.0	0.0	
	전남	1	0.0	100.0	0.0	0.0	0.0	2.00
경북	1	0.0	100.0	0.0	0.0	0.0	2.00	
경남	1	0.0	0.0	100.0	0.0	0.0	3.00	
제주	0	0.0	0.0	0.0	0.0	0.0		

□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2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3.05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3.43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부산'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4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1〉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2,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2	18.2	13.6	36.4	9.1	22.7	3.05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7	14.3	0.0	42.9	14.3	28.6	3.43
	마을기업	2	50.0	0.0	50.0	0.0	0.0	2.00
	자활기업	6	33.3	0.0	50.0	0.0	16.7	2.67
	사회적협동조합	7	0.0	42.9	14.3	14.3	28.6	3.29
사업장 소재지	서울	2	0.0	0.0	50.0	50.0	0.0	3.50
	부산	2	0.0	0.0	50.0	0.0	50.0	4.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3	33.3	33.3	0.0	33.3	0.0	2.33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2	0.0	0.0	100.0	0.0	0.0	3.00
	울산	1	0.0	0.0	100.0	0.0	0.0	3.00
	세종	1	0.0	0.0	100.0	0.0	0.0	3.00
	경기	6	16.7	16.7	33.3	0.0	33.3	3.17
	강원	2	50.0	0.0	0.0	0.0	50.0	3.00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0	0.0	0.0	0.0	0.0	0.0	
	전북	1	0.0	0.0	0.0	0.0	100.0	5.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2	50.0	50.0	0.0	0.0	0.0	1.50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 세제지원

- '세제지원'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3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7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만족도가 3.43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울산'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2〉 세제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3,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3	8.7	26.1	43.5	13.0	8.7	2.87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6	0.0	0.0	66.7	33.3	0.0	3.33
	마을기업	3	33.3	66.7	0.0	0.0	0.0	1.67
	자활기업	7	14.3	28.6	57.1	0.0	0.0	2.43
	사회적협동조합	7	0.0	28.6	28.6	14.3	28.6	3.43
사업장 소재지	서울	4	0.0	25.0	50.0	25.0	0.0	3.00
	부산	1	0.0	100.0	0.0	0.0	0.0	2.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3	33.3	66.7	0.0	0.0	0.0	1.67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2	0.0	0.0	100.0	0.0	0.0	3.00
	울산	2	0.0	0.0	50.0	50.0	0.0	3.50
	세종	1	0.0	0.0	100.0	0.0	0.0	3.00
	경기	6	0.0	16.7	50.0	16.7	16.7	3.33
	강원	2	50.0	0.0	0.0	0.0	50.0	3.00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0	0.0	0.0	0.0	0.0	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1	0.0	100.0	0.0	0.0	0.0	2.00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 경영컨설팅

- '경영컨설팅'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42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8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가 3.56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경기'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63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3〉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42,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42	11.9	23.8	31.0	21.4	11.9	2.98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9	0.0	11.1	44.4	22.2	22.2	3.56
	마을기업	8	12.5	37.5	37.5	12.5	0.0	2.50
	자활기업	15	26.7	20.0	20.0	26.7	6.7	2.67
	사회적협동조합	10	0.0	30.0	30.0	20.0	20.0	3.30
사업장 소재지	서울	6	16.7	16.7	16.7	50.0	0.0	3.00
	부산	2	0.0	0.0	100.0	0.0	0.0	3.00
	대구	2	0.0	50.0	50.0	0.0	0.0	2.50
	인천	4	25.0	50.0	25.0	0.0	0.0	2.0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66.7	33.3	0.0	3.33
	울산	3	0.0	33.3	33.3	33.3	0.0	3.00
	세종	2	0.0	0.0	50.0	50.0	0.0	3.50
	경기	8	0.0	12.5	37.5	25.0	25.0	3.63
	강원	2	50.0	0.0	0.0	0.0	50.0	3.00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1	0.0	0.0	0.0	0.0	100.0	5.00
	전북	1	0.0	0.0	0.0	0.0	100.0	5.00
	전남	2	0.0	50.0	0.0	50.0	0.0	3.00
	경북	4	50.0	50.0	0.0	0.0	0.0	1.50
경남	2	0.0	50.0	50.0	0.0	0.0	2.50	
제주	0	0.0	0.0	0.0	0.0	0.0		

□ **직업능력 교육훈련**

- '직업능력 교육훈련'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만족도가 3.2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서울'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4〉 직업능력 교육훈련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9,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9	6.9	20.7	51.7	17.2	3.4	2.90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6	0.0	33.3	33.3	33.3	0.0	3.00
	마을기업	5	20.0	60.0	20.0	0.0	0.0	2.00
	자활기업	13	7.7	0.0	69.2	23.1	0.0	3.08
	사회적협동조합	5	0.0	20.0	60.0	0.0	20.0	3.20
사업장 소재지	서울	4	0.0	0.0	50.0	50.0	0.0	3.50
	부산	2	0.0	100.0	0.0	0.0	0.0	2.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3	33.3	66.7	0.0	0.0	0.0	1.67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2	0.0	50.0	50.0	0.0	0.0	2.50
	울산	1	0.0	0.0	100.0	0.0	0.0	3.00
	세종	2	0.0	0.0	100.0	0.0	0.0	3.00
	경기	5	0.0	20.0	60.0	20.0	0.0	3.00
	강원	3	33.3	0.0	0.0	33.3	33.3	3.33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1	0.0	0.0	0.0	100.0	0.0	4.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4	0.0	0.0	100.0	0.0	0.0	3.00
	경남	1	0.0	0.0	100.0	0.0	0.0	3.00
제주	0	0.0	0.0	0.0	0.0	0.0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0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73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만족도가 3.29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강원'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5〉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30,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0	20.0	20.0	30.0	26.7	3.3	2.73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7	28.6	14.3	14.3	42.9	0.0	2.71
	마을기업	4	50.0	25.0	25.0	0.0	0.0	1.75
	자활기업	12	16.7	16.7	41.7	25.0	0.0	2.75
	사회적협동조합	7	0.0	28.6	28.6	28.6	14.3	3.29
사업장 소재지	서울	4	25.0	0.0	25.0	50.0	0.0	3.00
	부산	3	66.7	0.0	0.0	33.3	0.0	2.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4	0.0	75.0	25.0	0.0	0.0	2.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33.3	33.3	33.3	0.0	3.00
	울산	1	100.0	0.0	0.0	0.0	0.0	1.00
	세종	2	0.0	0.0	100.0	0.0	0.0	3.00
	경기	5	20.0	20.0	40.0	20.0	0.0	2.60
	강원	4	25.0	0.0	0.0	50.0	25.0	3.50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1	0.0	0.0	0.0	100.0	0.0	4.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2	0.0	50.0	50.0	0.0	0.0	2.50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 판로개척

- '판로개척'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29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52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만족도가 2.83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강원'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33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6〉 판로개척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29,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29	17.2	31.0	37.9	10.3	3.4	2.52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6	33.3	16.7	33.3	16.7	0.0	2.33
	마을기업	5	20.0	40.0	40.0	0.0	0.0	2.20
	자활기업	12	16.7	25.0	41.7	16.7	0.0	2.58
	사회적협동조합	6	0.0	50.0	33.3	0.0	16.7	2.83
사업장 소재지	서울	4	25.0	25.0	25.0	25.0	0.0	2.50
	부산	2	50.0	0.0	50.0	0.0	0.0	2.00
	대구	0	0.0	0.0	0.0	0.0	0.0	
	인천	4	0.0	75.0	25.0	0.0	0.0	2.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2	0.0	50.0	50.0	0.0	0.0	2.50
	울산	1	100.0	0.0	0.0	0.0	0.0	1.00
	세종	2	0.0	50.0	50.0	0.0	0.0	2.50
	경기	5	20.0	40.0	40.0	0.0	0.0	2.20
	강원	3	33.3	0.0	0.0	33.3	33.3	3.33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1	0.0	0.0	100.0	0.0	0.0	3.00
	전북	1	0.0	0.0	100.0	0.0	0.0	3.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3	0.0	33.3	66.7	0.0	0.0	2.67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구축'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수는 35개이며, 해당 정책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4점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만족도가 3.67점으로 가장 높음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의 만족도가 3.33점으로 가장 높음

〈표 3-17〉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만족도

(Base: 전체, n=35,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5	11.4	17.1	48.6	11.4	11.4	2.94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9	11.1	22.2	55.6	11.1	0.0	2.67
	마을기업	5	20.0	40.0	40.0	0.0	0.0	2.20
	자활기업	12	16.7	0.0	66.7	8.3	8.3	2.92
	사회적협동조합	9	0.0	22.2	22.2	22.2	33.3	3.67
사업장 소재지	서울	5	20.0	20.0	40.0	20.0	0.0	2.60
	부산	2	0.0	0.0	100.0	0.0	0.0	3.00
	대구	1	0.0	0.0	100.0	0.0	0.0	3.00
	인천	4	25.0	50.0	0.0	25.0	0.0	2.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33.3	33.3	0.0	33.3	3.33
	울산	3	0.0	33.3	33.3	0.0	33.3	3.33
	세종	2	0.0	50.0	50.0	0.0	0.0	2.50
	경기	7	14.3	0.0	57.1	28.6	0.0	3.00
	강원	3	33.3	0.0	33.3	0.0	33.3	3.00
	충북	0	0.0	0.0	0.0	0.0	0.0	
	충남	1	0.0	0.0	0.0	0.0	100.0	5.00
	전북	1	0.0	0.0	100.0	0.0	0.0	3.00
	전남	0	0.0	0.0	0.0	0.0	0.0	
	경북	3	0.0	0.0	100.0	0.0	0.0	3.00
	경남	0	0.0	0.0	0.0	0.0	0.0	
제주	0	0.0	0.0	0.0	0.0	0.0		

4) 향후 필요한 지원 필요성

□ 일자리 창출 인건비

- '일자리 창출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28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62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8〉 일자리 창출 인건비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5.4	2.7	10.8	20.3	60.8	4.28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0.0	0.0	9.5	19.0	71.4	4.62
	마을기업	9	0.0	11.1	0.0	11.1	77.8	4.56
	자활기업	27	7.4	3.7	14.8	18.5	55.6	4.11
	사회적협동조합	17	11.8	0.0	11.8	29.4	47.1	4.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0.0	30.0	30.0	40.0	4.10
	부산	5	0.0	0.0	0.0	40.0	60.0	4.60
	대구	3	0.0	0.0	0.0	33.3	66.7	4.67
	인천	4	0.0	0.0	0.0	75.0	25.0	4.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0.0	33.3	0.0	0.0	66.7	4.00
	세종	4	0.0	0.0	50.0	25.0	25.0	3.75
	경기	14	7.1	0.0	14.3	7.1	71.4	4.36
	강원	6	16.7	0.0	0.0	0.0	83.3	4.33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2	0.0	0.0	0.0	50.0	50.0	4.50
	전북	4	0.0	0.0	25.0	0.0	75.0	4.50
	전남	4	0.0	25.0	0.0	0.0	75.0	4.25
	경북	7	28.6	0.0	0.0	14.3	57.1	3.71
	경남	3	0.0	0.0	0.0	0.0	100.0	5.00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전문인력 인건비

- '전문인력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22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5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9〉 전문인력 인건비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4.1	4.1	14.9	20.3	56.8	4.22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4.8	0.0	28.6	19.0	47.6	4.05
	마을기업	9	0.0	11.1	22.2	0.0	66.7	4.22
	자활기업	27	3.7	7.4	11.1	25.9	51.9	4.15
	사회적협동조합	17	5.9	0.0	0.0	23.5	70.6	4.53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10.0	0.0	30.0	60.0	4.40
	부산	5	0.0	0.0	20.0	20.0	60.0	4.40
	대구	3	0.0	0.0	33.3	33.3	33.3	4.00
	인천	4	0.0	0.0	25.0	25.0	50.0	4.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0.0	0.0	0.0	0.0	100.0	5.00
	세종	4	0.0	0.0	75.0	25.0	0.0	3.25
	경기	14	7.1	0.0	14.3	7.1	71.4	4.36
	강원	6	33.3	0.0	16.7	33.3	16.7	3.00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2	0.0	0.0	0.0	50.0	50.0	4.50
	전북	4	0.0	0.0	25.0	0.0	75.0	4.50
	전남	4	0.0	25.0	0.0	0.0	75.0	4.25
	경북	7	0.0	14.3	0.0	28.6	57.1	4.29
	경남	3	0.0	0.0	33.3	0.0	66.7	4.33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사업개발비

- '사업개발비'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19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마을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56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0〉 사업개발비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4.1	1.4	18.9	23.0	52.7	4.19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4.8	0.0	14.3	33.3	47.6	4.19
	마을기업	9	0.0	0.0	22.2	0.0	77.8	4.56
	자활기업	27	3.7	0.0	25.9	22.2	48.1	4.11
	사회적협동조합	17	5.9	5.9	11.8	23.5	52.9	4.12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10.0	20.0	20.0	50.0	4.10
	부산	5	0.0	0.0	20.0	20.0	60.0	4.40
	대구	3	0.0	0.0	0.0	33.3	66.7	4.67
	인천	4	0.0	0.0	25.0	0.0	75.0	4.5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0.0	0.0	0.0	0.0	100.0	5.00
	세종	4	0.0	0.0	50.0	25.0	25.0	3.75
	경기	14	7.1	0.0	28.6	14.3	50.0	4.00
	강원	6	16.7	0.0	16.7	50.0	16.7	3.50
	충북	1	0.0	0.0	100.0	0.0	0.0	3.00
	충남	2	0.0	0.0	0.0	50.0	50.0	4.50
	전북	4	0.0	0.0	25.0	0.0	75.0	4.50
	전남	4	0.0	0.0	25.0	25.0	50.0	4.25
	경북	7	0.0	0.0	0.0	57.1	42.9	4.43
	경남	3	33.3	0.0	0.0	0.0	66.7	3.67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3.74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마을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22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1〉 금융지원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8.1	9.5	24.3	16.2	41.9	3.74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19.0	14.3	14.3	14.3	38.1	3.38
	마을기업	9	0.0	0.0	33.3	11.1	55.6	4.22
	자활기업	27	3.7	3.7	25.9	22.2	44.4	4.00
	사회적협동조합	17	5.9	17.6	29.4	11.8	35.3	3.53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0.0	40.0	30.0	30.0	3.90
	부산	5	0.0	40.0	0.0	0.0	60.0	3.80
	대구	3	33.3	0.0	0.0	0.0	66.7	3.67
	인천	4	0.0	25.0	25.0	25.0	25.0	3.5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0.0	0.0	0.0	0.0	100.0	5.00
	세종	4	0.0	0.0	50.0	25.0	25.0	3.75
	경기	14	14.3	0.0	21.4	7.1	57.1	3.93
	강원	6	33.3	33.3	0.0	16.7	16.7	2.50
	충북	1	0.0	0.0	100.0	0.0	0.0	3.00
	충남	2	0.0	0.0	100.0	0.0	0.0	3.00
	전북	4	0.0	25.0	25.0	25.0	25.0	3.50
	전남	4	0.0	0.0	0.0	25.0	75.0	4.75
	경북	7	0.0	14.3	28.6	28.6	28.6	3.71
경남	3	33.3	0.0	66.7	0.0	0.0	2.33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사회보험 지원

- '사회보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23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 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3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울산'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2〉 사회보험 지원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4.1	1.4	18.9	18.9	56.8	4.23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0.0	0.0	19.0	28.6	52.4	4.33
	마을기업	9	11.1	0.0	22.2	11.1	55.6	4.00
	자활기업	27	3.7	3.7	18.5	14.8	59.3	4.22
	사회적협동조합	17	5.9	0.0	17.6	17.6	58.8	4.24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0.0	10.0	20.0	70.0	4.60
	부산	5	0.0	0.0	20.0	20.0	60.0	4.40
	대구	3	0.0	0.0	0.0	33.3	66.7	4.67
	인천	4	0.0	0.0	25.0	25.0	50.0	4.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33.3	66.7	4.67
	울산	3	0.0	0.0	0.0	0.0	100.0	5.00
	세종	4	0.0	0.0	25.0	50.0	25.0	4.00
	경기	14	7.1	7.1	21.4	0.0	64.3	4.07
	강원	6	16.7	0.0	0.0	0.0	83.3	4.33
	충북	1	0.0	0.0	0.0	0.0	100.0	5.00
	충남	2	0.0	0.0	50.0	0.0	50.0	4.00
	전북	4	0.0	0.0	50.0	25.0	25.0	3.75
	전남	4	25.0	0.0	0.0	25.0	50.0	3.75
	경북	7	0.0	0.0	28.6	42.9	28.6	4.00
	경남	3	0.0	0.0	66.7	0.0	33.3	3.67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시설 및 운영비 대부

-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평균 4.07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자활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3〉 시설 및 운영비 대부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6.8	1.4	20.3	21.6	50.0	4.07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14.3	0.0	19.0	23.8	42.9	3.81
	마을기업	9	0.0	0.0	33.3	22.2	44.4	4.11
	자활기업	27	3.7	0.0	18.5	18.5	59.3	4.30
	사회적협동조합	17	5.9	5.9	17.6	23.5	47.1	4.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0.0	30.0	20.0	50.0	4.20
	부산	5	0.0	0.0	20.0	40.0	40.0	4.20
	대구	3	33.3	0.0	0.0	33.3	33.3	3.33
	인천	4	0.0	25.0	0.0	25.0	50.0	4.0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0.0	0.0	0.0	0.0	100.0	5.00
	세종	4	0.0	0.0	50.0	25.0	25.0	3.75
	경기	14	14.3	0.0	21.4	7.1	57.1	3.93
	강원	6	16.7	0.0	16.7	33.3	33.3	3.67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2	0.0	0.0	0.0	100.0	0.0	4.00
	전북	4	0.0	0.0	25.0	25.0	50.0	4.25
	전남	4	0.0	0.0	25.0	0.0	75.0	4.50
	경북	7	0.0	0.0	28.6	14.3	57.1	4.29
경남	3	33.3	0.0	33.3	0.0	33.3	3.00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세제지원**

-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08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자활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3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4〉 세제지원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6.8	5.4	16.2	16.2	55.4	4.08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14.3	0.0	14.3	14.3	57.1	4.00
	마을기업	9	0.0	0.0	33.3	22.2	44.4	4.11
	자활기업	27	3.7	3.7	14.8	11.1	66.7	4.33
	사회적협동조합	17	5.9	17.6	11.8	23.5	41.2	3.76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10.0	20.0	20.0	50.0	4.10
	부산	5	0.0	20.0	20.0	40.0	20.0	3.60
	대구	3	33.3	0.0	0.0	33.3	33.3	3.33
	인천	4	0.0	25.0	25.0	25.0	25.0	3.5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0.0	0.0	0.0	33.3	66.7	4.67
	세종	4	0.0	0.0	50.0	0.0	50.0	4.00
	경기	14	14.3	0.0	21.4	14.3	50.0	3.86
	강원	6	16.7	0.0	0.0	0.0	83.3	4.33
	충북	1	0.0	0.0	0.0	0.0	100.0	5.00
	충남	2	0.0	0.0	0.0	50.0	50.0	4.50
	전북	4	0.0	25.0	25.0	0.0	50.0	3.75
	전남	4	0.0	0.0	0.0	0.0	100.0	5.00
	경북	7	0.0	0.0	14.3	0.0	85.7	4.71
	경남	3	33.3	0.0	33.3	33.3	0.0	2.67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경영컨설팅

- '경영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3.5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3.76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5〉 경영컨설팅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10.8	6.8	32.4	21.6	28.4	3.50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14.3	9.5	33.3	14.3	28.6	3.33
	마을기업	9	0.0	22.2	33.3	22.2	22.2	3.44
	자활기업	27	14.8	0.0	37.0	18.5	29.6	3.48
	사회적협동조합	17	5.9	5.9	23.5	35.3	29.4	3.76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0.0	50.0	30.0	20.0	3.70
	부산	5	0.0	20.0	40.0	20.0	20.0	3.40
	대구	3	0.0	33.3	33.3	33.3	0.0	3.00
	인천	4	0.0	25.0	25.0	50.0	0.0	3.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33.3	0.0	33.3	33.3	0.0	2.67
	세종	4	0.0	0.0	75.0	0.0	25.0	3.50
	경기	14	21.4	0.0	35.7	14.3	28.6	3.29
	강원	6	33.3	0.0	0.0	16.7	50.0	3.50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2	0.0	0.0	50.0	0.0	50.0	4.00
	전북	4	0.0	0.0	50.0	0.0	50.0	4.00
	전남	4	0.0	50.0	0.0	25.0	25.0	3.25
	경북	7	14.3	0.0	42.9	14.3	28.6	3.43
	경남	3	33.3	0.0	0.0	33.3	33.3	3.33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직업능력 교육훈련**

- '직업능력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3.57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자활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3.7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대전'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6〉 직업능력 교육훈련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9.5	4.1	32.4	28.4	25.7	3.57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14.3	4.8	38.1	14.3	28.6	3.38
	마을기업	9	0.0	11.1	22.2	55.6	11.1	3.67
	자활기업	27	11.1	3.7	25.9	22.2	37.0	3.70
	사회적협동조합	17	5.9	0.0	41.2	41.2	11.8	3.53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10.0	40.0	20.0	30.0	3.70
	부산	5	0.0	0.0	40.0	40.0	20.0	3.80
	대구	3	33.3	0.0	33.3	33.3	0.0	2.67
	인천	4	0.0	25.0	25.0	50.0	0.0	3.25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0.0	0.0	100.0	5.00
	울산	3	33.3	0.0	66.7	0.0	0.0	2.33
	세종	4	0.0	0.0	75.0	0.0	25.0	3.50
	경기	14	21.4	0.0	28.6	21.4	28.6	3.36
	강원	6	16.7	0.0	33.3	16.7	33.3	3.50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2	0.0	0.0	0.0	100.0	0.0	4.00
	전북	4	0.0	0.0	50.0	0.0	50.0	4.00
	전남	4	0.0	25.0	0.0	50.0	25.0	3.75
	경북	7	0.0	0.0	42.9	28.6	28.6	3.86
경남	3	33.3	0.0	0.0	66.7	0.0	3.00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03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마을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78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경남'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7〉 공공기관 우선구매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9.5	1.4	21.6	12.2	55.4	4.03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9.5	0.0	23.8	9.5	57.1	4.05
	마을기업	9	0.0	0.0	11.1	0.0	88.9	4.78
	자활기업	27	7.4	0.0	25.9	7.4	59.3	4.11
	사회적협동조합	17	17.6	5.9	17.6	29.4	29.4	3.47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10.0	0.0	10.0	20.0	60.0	4.20
	부산	5	0.0	20.0	20.0	0.0	60.0	4.00
	대구	3	33.3	0.0	33.3	33.3	0.0	2.67
	인천	4	0.0	0.0	0.0	50.0	50.0	4.5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33.3	33.3	33.3	4.00
	울산	3	33.3	0.0	0.0	0.0	66.7	3.67
	세종	4	0.0	0.0	50.0	0.0	50.0	4.00
	경기	14	14.3	0.0	21.4	14.3	50.0	3.86
	강원	6	16.7	0.0	16.7	0.0	66.7	4.00
	충북	1	0.0	0.0	100.0	0.0	0.0	3.00
	충남	2	0.0	0.0	50.0	0.0	50.0	4.00
	전북	4	0.0	0.0	25.0	0.0	75.0	4.50
	전남	4	0.0	0.0	25.0	0.0	75.0	4.50
	경북	7	14.3	0.0	28.6	0.0	57.1	3.86
경남	3	0.0	0.0	0.0	0.0	100.0	5.00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판로개척

- '판로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4.07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마을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78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경남'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8〉 판로개척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8.1	1.4	18.9	18.9	52.7	4.07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4.8	0.0	19.0	14.3	61.9	4.29
	마을기업	9	0.0	0.0	11.1	0.0	88.9	4.78
	자활기업	27	7.4	0.0	22.2	22.2	48.1	4.04
	사회적협동조합	17	17.6	5.9	17.6	29.4	29.4	3.47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10.0	0.0	10.0	20.0	60.0	4.20
	부산	5	0.0	20.0	20.0	0.0	60.0	4.00
	대구	3	0.0	0.0	0.0	100.0	0.0	4.00
	인천	4	0.0	0.0	0.0	50.0	50.0	4.5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33.3	0.0	66.7	4.33
	울산	3	33.3	0.0	0.0	0.0	66.7	3.67
	세종	4	0.0	0.0	50.0	0.0	50.0	4.00
	경기	14	14.3	0.0	21.4	7.1	57.1	3.93
	강원	6	16.7	0.0	16.7	16.7	50.0	3.83
	충북	1	0.0	0.0	0.0	100.0	0.0	4.00
	충남	2	0.0	0.0	50.0	0.0	50.0	4.00
	전북	4	0.0	0.0	25.0	0.0	75.0	4.50
	전남	4	0.0	0.0	25.0	0.0	75.0	4.50
	경북	7	14.3	0.0	28.6	42.9	14.3	3.43
경남	3	0.0	0.0	0.0	0.0	100.0	5.00	
제주	1	0.0	0.0	0.0	100.0	0.0	4.00	

□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5점척도 평균 3.91점인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정책의 필요도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로 확인했을 때, '마을기업'에서 해당 정책 필요도를 4.44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이 두 개 이상인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충남' 지역 소재 기업에서 5점으로 해당 정책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9〉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Base: 전체, n=74, Unit: 명, %, 점)

구성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74	6.8	0.0	29.7	23.0	40.5	3.91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9.5	0.0	23.8	38.1	28.6	3.76
	마을기업	9	0.0	0.0	22.2	11.1	66.7	4.44
	자활기업	27	7.4	0.0	40.7	3.7	48.1	3.85
	사회적협동조합	17	5.9	0.0	23.5	41.2	29.4	3.88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0.0	40.0	20.0	40.0	4.00
	부산	5	0.0	0.0	40.0	0.0	60.0	4.20
	대구	3	0.0	0.0	0.0	100.0	0.0	4.00
	인천	4	0.0	0.0	0.0	50.0	50.0	4.50
	광주	0	0.0	0.0	0.0	0.0	0.0	
	대전	3	0.0	0.0	33.3	33.3	33.3	4.00
	울산	3	33.3	0.0	33.3	33.3	0.0	2.67
	세종	4	0.0	0.0	75.0	0.0	25.0	3.50
	경기	14	14.3	0.0	21.4	21.4	42.9	3.79
	강원	6	16.7	0.0	16.7	33.3	33.3	3.67
	충북	1	0.0	0.0	100.0	0.0	0.0	3.00
	충남	2	0.0	0.0	0.0	0.0	100.0	5.00
	전북	4	0.0	0.0	25.0	25.0	50.0	4.25
	전남	4	0.0	0.0	25.0	0.0	75.0	4.50
	경북	7	0.0	0.0	42.9	14.3	42.9	4.00
경남	3	33.3	0.0	0.0	33.3	33.3	3.33	
제주	1	0.0	0.0	100.0	0.0	0.0	3.00	

5)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1순위

-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했을 때,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일자리 창출 인건비’(36.5%)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가 동일하게 13.5%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3-30〉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1순위

(Base: 전체, n=74, Unit: 명, %)

구성	전체	1) 일자리 창출 인건비	2) 전문인력 인건비	3) 사업 개발비	4) 금융 지원	5) 사회 보험 지원	6)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7) 세제 지원	8) 경영 컨설팅	9) 직업 능력 교육 훈련	10) 공공 기관 우선 구매	11) 판로 개척	12) 네트워크 구축
전체	74	36.5	13.5	8.1	5.4	4.1	13.5	2.7	0.0	0.0	10.8	2.7	2.7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52.4	4.8	14.3	0.0	4.8	14.3	0.0	0.0	9.5	0.0	0.0
	마을기업	9	11.1	33.3	11.1	11.1	0.0	0.0	11.1	0.0	0.0	22.2	0.0
	자활기업	27	25.9	7.4	3.7	11.1	7.4	18.5	3.7	0.0	0.0	11.1	7.4
	사회적 협동 조합	17	47.1	23.5	5.9	0.0	0.0	11.8	0.0	0.0	0.0	5.9	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40.0	0.0	0.0	10.0	0.0	20.0	10.0	0.0	0.0	20.0	0.0
	부산	5	40.0	6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구	3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천	4	0.0	25.0	50.0	25.0	0.0	0.0	0.0	0.0	0.0	0.0	0.0
	광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	3	33.3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울산	3	0.0	0.0	33.3	0.0	0.0	33.3	0.0	0.0	0.0	33.3	0.0
	세종	4	50.0	0.0	0.0	0.0	0.0	25.0	0.0	0.0	0.0	25.0	0.0
	경기	14	28.6	14.3	7.1	7.1	14.3	0.0	0.0	0.0	0.0	14.3	7.1
강원	6	66.7	0.0	0.0	0.0	0.0	0.0	0.0	0.0	0.0	16.7	16.7	

구성	전체	1) 일자리 창출 인건비	2) 전문 인력 인건비	3) 사업 개발 비	4) 금융 지원	5) 사회 보험 지원	6)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7) 세제 지원	8) 경영 컨설팅	9) 직업 능력 교육 훈련	10) 공공 기관 우선 구매	11) 판로 개척	12) 네트워크 구축
전체	74	36.5	13.5	8.1	5.4	4.1	13.5	2.7	0.0	0.0	10.8	2.7	2.7
충북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	4	0.0	25.0	25.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전남	4	25.0	0.0	0.0	0.0	0.0	0.0	25.0	0.0	0.0	50.0	0.0	0.0
경북	7	28.6	14.3	0.0	0.0	0.0	57.1	0.0	0.0	0.0	0.0	0.0	0.0
경남	3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순위

-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했을 때,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전문인력 인건비’(21.6%)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인건비’(14.9%) 순의 응답을 보임

〈표 3-31〉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2순위

(Base: 전체, n=74, Unit: 명, %)

구성	전체	1) 일자리 창출 인건비	2) 전문 인력 인건비	3) 사업 개발비	4) 금융 지원	5) 사회 보험 지원	6)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7) 세제 지원	8) 경영 컨설팅	9) 직업 능력 교육 훈련	10) 공공 기관 우선 구매	11) 판로 개척	12) 네트 워크 구축	
전체	74	14.9	21.6	12.2	4.1	4.1	8.1	4.1	4.1	2.7	10.8	12.2	1.4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사회적 기업	21	14.3	19.0	0.0	4.8	9.5	14.3	9.5	0.0	0.0	19.0	9.5	0.0
	마을기업	9	22.2	0.0	33.3	11.1	0.0	11.1	0.0	0.0	0.0	22.2	0.0	
	자활기업	27	14.8	22.2	7.4	3.7	3.7	7.4	3.7	3.7	14.8	11.1	3.7	
	사회적협동 조합	17	11.8	35.3	23.5	0.0	0.0	0.0	0.0	11.8	5.9	0.0	11.8	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	0.0	30.0	0.0	0.0	0.0	10.0	0.0	0.0	0.0	20.0	40.0	0.0
	부산	5	20.0	0.0	20.0	0.0	0.0	20.0	0.0	0.0	0.0	20.0	20.0	0.0
	대구	3	33.3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인천	4	75.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	3	0.0	33.3	33.3	0.0	0.0	0.0	0.0	0.0	33.3	0.0	0.0	0.0
	울산	3	33.3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세종	4	0.0	50.0	0.0	0.0	0.0	25.0	25.0	0.0	0.0	0.0	0.0	0.0
	경기	14	28.6	21.4	14.3	7.1	0.0	7.1	0.0	7.1	7.1	0.0	7.1	0.0
	강원	6	0.0	0.0	16.7	0.0	0.0	0.0	33.3	16.7	0.0	33.3	0.0	0.0
	충북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	2	0.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전북	4	0.0	0.0	25.0	0.0	0.0	0.0	0.0	0.0	0.0	50.0	25.0	0.0
	전남	4	0.0	0.0	25.0	25.0	0.0	25.0	0.0	0.0	0.0	0.0	25.0	0.0
	경북	7	14.3	42.9	0.0	0.0	14.3	0.0	0.0	0.0	0.0	14.3	0.0	14.3
경남	3	0.0	0.0	33.3	0.0	33.3	0.0	0.0	0.0	0.0	0.0	33.3	0.0	
제주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

 사회적 기업

-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의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32〉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사회적 기업)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사회적 기업	청년일자리창출	노인시설할인서비스		
	60명유지		노인취미교실	
	60명유지			
	10%추가 증원	10%추가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10개 이상 확보	매월 정기적인 기부		
	고령자 및 장애인 채용	취약계층 방역 서비스 제공		
	장기근속자 많음	계속적인 진행	계속적인 진행	기타 단체 등 기부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최저임금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내 장애인 네트워크에 공헌	
	취약계층일자리창출 및 유지			
	청년예술가취업, F6비자,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에게 일자리 창출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원, 저소득층아동 교육,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생활문화예술공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다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관광 공연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중	취약계층 지원사업확대	지역내 연계기관과 협력 유지 및 참여	
	자활근로자참여	항만공사청소서비스		
			지역 문화예술 확산	
	신규인력 확충	코로나로 공연을 많이 못했지만 무료공연실시	작품개발	
자활근로자참여	장애인청소봉사			

□ 마을 기업

○ 조사에 참여한 마을 기업의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33〉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마을 기업)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마을 기업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없었음	지역적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챙김이나 안부 여쭙기를 실행하고, 청춘헤어샵을 열어 염색봉사를 실시했음	마을기업 수익금으로 마을 김장, 어르신 선물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400만원을 후원하였음	
			지역아동센터, 대구미혼모센터 먹거리 나눔	
	고용유지			
	일자리 5명 이상 창출		지역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체험 프로그램운영	
	고용유지		유지	
	취약계층과 노인일자리제공	매년 하고 있는 주5회 마을주민 중식제공	장학금, 아동복지기금, 경로당 떡국나눔,	
	노인일자리	마을문화활동지원	행사, 축제 참여	

□ 자활 기업

○ 조사에 참여한 자활 기업의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34〉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자활 기업)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자활 기업			취약계층아동 결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이상 추가 고용	취업준비희망자 인턴십 기회제공	지역사회 봉사활동	
	20명 창출	확대	확대	
	아직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서	
	3명			
	수급자 고용			
	기존 고용된 인력 유지		취약계층 집수리 시행 예정	
			지역아동센터장애인지역학교재능기부	
			독고 노인 청소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후원	
	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채용		야사복지관 및 YMCA, 장애인복지관 등에 기부하고있음	취약계층의, 한 두 가구에 밑반찬을 제공함
			야사복지관 및 YMCA, 장애인복지관 등에 기부하고있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인		주거복지 서비스 무상제공	
			수입금에서 10%공헌	
		취약계층 생활개선		

□ 사회적 협동조합

-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35〉 올해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인턴십
	청년일자리 유지 청년일경험지원	초등아동 돌봄 및 교육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 주민강좌 진행	마을 축제운영
	유지 60%이상	100건 이상		
	고용인원 50% 이상 취약계층 채용 및 유지	취약계층 연인원 30,000명 이상에게 도시락 제공	취약계층에게 1회 이상 후원품 제공	
		의료공공재 역할	접근경과 활용도를 높인 의료서비스	
		아동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		
	고용	돌봄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위탁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야간보호교사고용			
			지역경제활성화	
	고령자 취업	고령자 직업교육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직업교육
		지역복지 서비스	지역내 아동청소년 돌봄과 여가활용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제공	학교밖청소년 일자리 체험제공 면마스크 무로기부	
			지역전통시장 활성화포럼 및 상인교육	

7) 성과측정 지표

□ 사회적 기업

○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의 성과측정 지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3-36〉 성과측정 지표 의견(사회적 기업)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사회적 기업		원주민, 노령, 저소득 계층 일자리 창출	원주민 우선 채용	
	일자리 수와 지급총액	수혜자 수	투입금액	
	일자리 수와 지급총액	수혜자 수	투입금액	
	상용직확대가 아닌 단기아르바이트직 확대에 그침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지원 기관이 1곳만 증가됨		
	일자리 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인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근로자 처우 개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채용 비율로 확인			
	고용유지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인원수, 유지 여부	채용인원수 확인	활동내역, 기부금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유지 비율등 정량적 평가	사회공헌 횟수나 금액 등 수치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 평가와 찾아가는 공연, 교육 등과 같이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헌은 정성적 평가를 복합적으로 사용	커뮤니티서비스 제공,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공적 등을 정성적 평가	
	유지율	사회서비스 목표치	협력 및 연계 횟수	
	사업성과	공연제공	작품활동으로 문화예술 이미지제고	
	지속적인일자리			

마을 기업

○ 조사에 참여한 마을 기업의 성과측정 지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3-37〉 성과측정 지표 의견(마을 기업)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마을 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 매출 신장 극대화			
	일자리 인원 증가		지역행사참여빈도	
	일자리 갯수 및 시간		금액 환산	
	마을에 살고 있는 분에게 일자리 지원			
	종업원 비율	마을주민 만족도		

자활 기업

○ 조사에 참여한 자활 기업의 성과측정 지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3-38〉 성과측정 지표 의견(자활 기업)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자활 기업	전년대비 취약계층 연평균 고용인원 증감	연평균 참여인원	기부 또는 봉사활동 회수	
	고용규모			
	수급자고용			

□ 사회적 협동조합

○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과측정 지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3-39〉 성과측정 지표 의견(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
사회적 협동조합		서비스제공확인 및 사진	행사 사진	인턴십 일지
	근무자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취약계층 60% 100% 달성			
	일자리 제공 비율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및 만족도	서비스 접근성 정도 및 만족도	
	만족결과서	만족결과서	만족결과서	만족결과서
	급여액 / 인원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정도	

제4장

성과지표 개발(안)

제1절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방향

제2절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안)

제4장

성과지표 개발(안)

KRILA

제1절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방향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됨
 - 전통적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설립 목적이 있음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전통적 기업들 중에도 사회적 책임을 경영 목적에 명시하거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재무적 수익성 추구를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제기됨
 -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크게 (1)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2) 사회적책임 기업, (3)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주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대비되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최종 성과의 측정도 사회적기업이 달성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
-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나누어 평가함
 - 사회적 성과는 대내적으로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기업 내부운영의 민주성 등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는 창출된 수익의 사회적 활용,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조성 노력 등이 고려됨

- 경제적 성과 관점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대내적으로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또 얼마나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으로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지를 확인함
- 혁신 성과 관점에서는 기업 운영과정의 혁신, 제품 자체나 운영방식 등 사업의 전 영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혁신성을 평가함
- 구체적으로 사회적 성과 창출여부는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 정도, 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사회적 환원을 위한 노력도, 운영의 민주성 및 근로자 지향성 등이 사회적 성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 지향성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임금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 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의 창출을 고려해야 함
-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고용인력의 수, 매출액 등의 영업성과,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로 반영될 수 있음
- 혁신 성과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활동을 기울였는지 여부
- 권한위임, 프로젝트 조직 운영, 의사소통 구조 개선,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 제도개선에 혁신을 도입하였는지
-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의 출시를 통해 고객만족도, 이용자 수 증가, 수익발생, 특허 및 상표권,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등의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 등을 혁신성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

- 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됨
-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이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미
 -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추구하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은 마을기업의 이익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연계 되는 편익까지도 포함하여 측정
- 이러한 마을기업은 크게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4가지 운영 원칙을 고려하여 설립·운영이 되어야 함
- ①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함
 - ② (공공성) 호혜와 협력에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 ③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④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공동체성은 공동체가 주도하여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시 회원은 최소 5인 이상, 혹은 회원 10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측정
 - 설립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이 공공성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설립목적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을 추구해야 함
 - 마을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되,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 출자금 납입 및 배당금의 분배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 등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지역성은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동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함을 의미함
 - 마을기업은 지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에 소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내에서 생산, 소비, 교환 및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 경제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권장됨
- 기업성은 마을기업이 정부 보조금 수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함
 - 마을기업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며,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어야 함
 - 기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이익의 10% 이상은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면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활기업은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목적으로 함(엄명용, 2014)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엄명용, 2014)
 -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먼저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 자활역량 평가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함
- 자활기업의 평가는 자활 성공률과 취업 유지율 같은 자활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
 - 자활 성공률은 자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탈수급률, 일반기업에 취업, 창업하게 되는 실적, 자활기업 취업, 창업률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취업 유지율 같은 경우 자활기업에 3개월, 6개월 혹은 그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 자활기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 소용교육 등의 참여자 교육의 실시 및 이수여부도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 임
- 자활기업이 지역유형별 특화사업을 개발 또는 발굴하여 지자체 및 민간위탁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일자리와 연계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함

-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일자리 성공률, 지역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일자리 기여율, 사회적 경제관련 공동사업, 워크숍, 행사 진행여부가 성과측정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비영리성을 더욱 강조함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설립인원 5인,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조합원자격요건, 가능한 사업, 회계, 등기 등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여,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음(복지개발원, 2014)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만 함
-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조합을 청산 시에도 보다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복지개발원, 2014)
 -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나뉨(양미선, 2018)

-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의 특성이외에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측정도 경제적 성과를 제외하고 사회적 성과와 혁신 성과로 나누어 측정할수 있음

제2절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안)

1. 측정 지표 구성 및 의의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구성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도 측정은 정량 및 정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고려
- 정량 측정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목표 설정 후 달성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부응한 정도에 대한 정도를 수치로 제시
- 정성 측정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정량 성과를 보조하는 역할
- 또한, 성과 측정 지표는 개별 기업에 따라 평가기준을 구축하여 성과에 부합되는 정도를 제시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설정 기준

- (효과성) 정부 후반기를 맞아 각 자치단체도 그간 추진해온 국정 주요시책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
 -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정책목표가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요시책 성과 창출 및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고려
- (대표성) 평가 결과와 각 지역이 창출한 국정성과 간 차이가 없도록 국정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단순 인력·재원 및 물자의 투입 또는 정책 수행의 과정보다는 정책의 산출과 결과를 평가하는 ‘국민체감형 결과지표’ 개발
- (공정성·수용성)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여건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평가지표 설계 시 지역 특성을 고려
 - 인구 규모, 면적, 기초지자체 수,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보정지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지표 설정

- (특수상황 고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변화한 중앙부처의 정책목표와 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주요시책을 함께 고려한 지표 개발
 -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기존 지표의 효과성 검증 등, 변화하는 중앙·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한 지표개발 및 수정

□ 사회적경제 측정 지표 평가 기준

- 정부 비전, 목표, 전략, 100대 국정과제와의 부합도 검토를 통한 방향 설정

[그림 4-1] 국가비전-목표-전략-과제 관계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쏠쏠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 성과측정 지표 등록(안) 및 체크리스트

□ 지표등록표

〈표 4-1〉 지표등록표 (안)

국정목표	5대 국정목표 중 해당 국정목표명 선택		지표번호	미작성
국정전략	20대 국정전략 중 해당 국정전략명 선택		검토결과	미작성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 해당 국정과제명 선택		평가기준치	미작성
평가지표	지표명 기재			
평가 사용년도	계속지표일 경우 '17,'18,'19 등 복수 개 작성		신규여부	선택
지표성격	①국가위임사무 ②국고보조사업 ③국가주요시책 ④ 기타		실적입력주기 선택	실적입력주체 선택
지표유형	선택 ①정량 ②정성	선택 ① 공통 ②부분	연계시스템	연계여부 선택
	선택 ①정순 ②역순	선택 ①계획 ②집행 ③산출 ④결과활용		미작성
	선택 ①통계자료 활용 ②증빙자료 활용 ③통계증빙자료 혼합 활용			미작성
평가근거	평가실시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명 및 조문 내용 및 지표성격에 대한 설명 기재			
평가목적	평가실시의 실질적인 목적을 기술 (예시)국정과제 추진, 사업 추진실적 점검,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배분 등			
목표치	산식 계산결과 도출되는 값 기준 목표치(시·도별 개별부여 가능)			
평가의 정책목표	평가로 인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예시)여성위원회 위촉률을 2020년까지 35%수준까지 향상			
평가기간 (예상)	선택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⑤5년			
평가 시책지표의 현 수준	시책지표의 현재 수준 기재 (예시) 여성 위원회 위촉률 17개 시·도 평균: 30%(2018년 현재)			
지표매뉴얼	파일로 첨부			
측정방법	산식과 산식설명 등 기재			
시스템 구현서식	평가시스템 상에서 상기 산식을 구현할 표 기재			
분석자료	미작성			
증빙자료	부처별 통계 혹은 시스템 활용 등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시 '증빙자료 불필요' 기재 필요 시 증빙자료 기재			

□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는 평가일반 및 중점 심의사항으로 구분

〈표 4-2〉 지표 일반 체크리스트

구분	기재사항	비고
지표명		
지표목적	.	
근거법령	.	법령부재 시 관련시책 표기
평가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국가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사업 <input type="checkbox"/> 국가주요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수표기 가능
평가대상	광역지자체만 평가(<input type="checkbox"/> 광역전체, <input type="checkbox"/> 광역일부) 광역+기초지자체 평가(<input type="checkbox"/> 광역(기초전체), <input type="checkbox"/> 광역(기초일부))	
지표유형	<input type="checkbox"/> 정량지표, <input type="checkbox"/> 정성지표 / <input type="checkbox"/> 신규지표, <input type="checkbox"/> 계속지표	정량(목표달성도) 정성(우수사례)

〈표 4-3〉 지표 중점 심의사항

구분	기재사항	비고
주요업무계획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2016년 <input type="checkbox"/> 2017년 <input type="checkbox"/> 2018년 <input type="checkbox"/> 2019년 <input type="checkbox"/> 2020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계속사업인 경우 복수 연도 표기 가능	
계획서 방침유무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해당”인 경우 별도제출
지표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지표(계획수립, 인력·재원 및 물자의 투입 등 반영) <input type="checkbox"/> 결과지표(정책의 산출과 결과 등 반영)	
평가지표 반영기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4년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5년 이상 최초 지표반영 연도기재
과거 신규지표 제출시 미반영 여부 (최초신규 지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작성예시) 신규지표 제출연도, 미반영 사유, 재신청 사유 - 2019년 신규지표 제출(2019년 지표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지자체 예산부담 과다로 지표실행 어려움 - (재신청 사유) ~의 사유로 재신청	“해당”인 경우, 위원회에서 미반영된 사유 작성 (별지작성 가능)

구분	기 재 사 항	비 고								
과거 계속지표 제출시 미반영 여부 (계속지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해당”인 경우, 위원회에 서 미반영된 사유 작성 (별지작성 가능)								
	(작성예시) 계속지표 유지연도, 미반영 연도, 미반영 사유, 재신청 사유 - 2015~2018년까지 계속지표(2019년 지표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지자체 역할 미미, 평가실익 없음 - (재신청 사유) ~의 사유로 재신청									
사업수행 기관	<input type="checkbox"/> 광역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광역 및 기초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교육자치단체(교육청) <input type="checkbox"/> 특별행정기관(고용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새일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단체()	공공, 민간, 기타단체명 표 기								
정량지표 산 식	(주요산식 기재)	신규 및 계속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년도와 산식이 바뀌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계속지표 (신규지표는 미해당 표기)								
	· 주요산식이 바뀌었으면 바뀐점과 사유를 기재	별지작성 가 능								
정성지표 내 용	(주요내용 기재)	신규 및 계속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년도와 내용이 바뀌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계속지표 (신규지표는 미해당 표기)								
	· 주요내용이 바뀌었으면 바뀐점과 사유를 기재	별지작성 가 능								
지 자 체 의견수렴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찬성의견</td> <td>반대의견</td> </tr> <tr> <td>(서울)</td> <td>(서울)</td> </tr> <tr> <td>(00)</td> <td>(00)</td> </tr> <tr> <td>(00)</td> <td>(00)</td> </tr> </table>	찬성의견	반대의견	(서울)	(서울)	(00)	(00)	(00)	(00)	“해당”인 경우 별지작성 가능
찬성의견	반대의견									
(서울)	(서울)									
(00)	(00)									
(00)	(00)									
지 자 체 자 치 권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직분야(신설, 변경) <input type="checkbox"/> 인사분야(인력충원) <input type="checkbox"/> 재정분야(예산확 충) <input type="checkbox"/> 입법분야(자치법규 제·개정) <input type="checkbox"/> 기 타()	복수표기가능								
개별(자체) 평가 등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개별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자체 평가명과 부처기재 (예시) ○○년 ○○ 평가(공모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 ○○○부	“해당”인 경우 평가 및 부처명 기 재								
평가지표 대안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정례반상회 등 협력방안)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기 타()	“기타”인 경우 해당 협의제도 기재								

3. 사회적경제기업 성과측정 지표

□ 정량지표

- [대안1]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조례 제정

〈표 4-4〉 사회적경제기업 정량지표(안)

지표명	사회적경제기업 애로 해소 조례 제정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① 사회적경제 운영 과제 중 중앙부처 중점과제로 선정된 과제 및 개선 실적 ②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타 혁신 건의과제 중 행안부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된 과제 및 개선 실적
	평가 필요성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애로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기대효과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체감도 제고
측정 방법	○ 산식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애로 해소건
	세부 산식	실적건수(선정건수 + 해결건수)
○ 산식설명		
- 선정건수: 중앙부처(행안부, 고용부, 복지부, 기재부) 건의 과정 중 선정된 건수		
- 해결건수:		
○ 선정건수 중, '21.12.31.까지 제도개선이 협의(수용)된 건수		
○ 지자체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여 '21.12.31.까지 제도개선이 협의(수용)된 건수		

○ [대안2]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표 4-5〉 사회적경제기업 정량지표(안)

지표명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
	평가 필요성	사회적 가치(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등의 내용을 포괄) 중심 사회혁신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지원
	기대효과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가치 확산 혁신모델을 발굴 및 확산
측정 방법	○ 산식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수 대비 취창업자수
	세부 산식	전년대비 증가
	○ 산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까지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취창업자수 비율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중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한 비율 ◦ 시도별 목표치는 과년도 증가분의 평균 적용 		

□ 정성지표

○ [대안1]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견인

〈표 4-6〉 사회적경제기업 정성지표(안)

지표명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우수사례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지자체가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 우수사례를 창출한 실적	
	평가 필요성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지자체가 스스로 사회적경제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지역성장을 활성화	
	기대효과	지자체가 스스로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의 탁월한 우수사례를 창출하게 할 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추진기반 조성	
측정 방법	○ 산식 지자체 자율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 우수사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조례·규칙, 예규·지침·고시 등)를 제·개정(정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성장과 연계한 사례 중 우수사례 1건		
	○ 산식설명 지자체 자율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가치를 달성한 우수사례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적정성(10%)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성장간 우수사례로 적절한 지적정성 평가
노력도(3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효과성(40%)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	
연계·파급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활용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대안2]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 우수사례

〈표 4-7〉 사회적경제기업 정성지표(안)

지표명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우수사례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지원 시책 중 구체적인 성과를 낸 사례 발굴		
	평가 필요성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외에도 주민생활과 직접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운영이 필요.		
	기대효과	현장에 밀접한 지자체에서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측정 방법	○ 산식 지자체 자율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지원 우수사례			
	○ 산식설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달성을 위한 지원사례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 또는 벤치마킹 성과(20)	지역경제 특성 반영,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등 평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3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규제 및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반영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30)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역경제 유관기관, 각종 협력단체와의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노력도 및 정책역량 (20)	지역 상권의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 역량	

제5장

정책방안 및 성과지표

제1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2절 관리방안

제5장

정책방안 및 성과지표

KRILA

제1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사회적 경제 기업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 조직 유형별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호 정보 공유 및 연대를 통한 위험감소, 개개 업체들에 자신감 및 동기부여, 사업능력과 정보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창조적·교량적 행위(Peredo and Chrisman, 2006)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별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광역 및 기초단위로 연결되는 관련 조직들의 연대 및 네트워크 구축
- 세부적으로는 동종업종 네트워킹 강화도 함께 추진
 - 동종업종의 경우 업종협의체를 형성하여 사업적 연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 사회적 기업의 경우 문화예술, 청소, 교육, 사회복지 등 관련 업종간 협의체 구축 가능
 - 협동조합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간 협의체 구축 가능
 - 마을기업의 경우 관광체험, 문화예술, 공예품, 재활용 등 동종 업종 간 업종 협의체를 구축하여 연계 촉진
 - 업종 기반의 협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간의 부족한 자산과 정보, 소비자망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

- 관련 조직의 연대를 촉진하는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 인적자원 개발,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하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증대

□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계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별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의 단기적 재정지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유리한 환경과 지지기반의 성숙이 그 지속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건
-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사회 내에서 공생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 간 연계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연대 및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상조적 환경을 조성하고, 각 조직의 지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력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민-관-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혁신 촉진
 - 지역단위에서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조직, 사기업 및 다양한 지역단위의 조직, 그리고 일반 주민 들도 함께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 사회적 경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는 관련 주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발전방향을 협의·도출
- 사회적경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는 관련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자본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사회적 성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
- 사회적 경제 협력적 거버넌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사회적 경제 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가능

□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정책은 각 영역별로 정책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점 노정(곽행구, 2016)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역자원에 기반한 지역성과 현장에 밀착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
 - 사업상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상존
- 사회적 경제 체계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 간 교차 및 네트워킹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체계가 통합적이고 융합형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이 극대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지자체 행정단위에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관련 부서를 통합하거나 추진단(TF) 등의 형식으로 융합적으로 구성하고, 지자체 단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사회적 경제 통합 중간지원 센터 구축

- 민간단위에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통합형 중간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
- 따라서 광역 및 지자체 단위 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지원센터를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간,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민간 다양한 주체간 교차 및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및 기초단위 거점 마련

- 지역 단위에서 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면서 정보교류, 상호학습, 역량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점 시설의 마련 필요성 대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내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 및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사회적경제 조직간 교류 및 소통증진을 위한 사랑방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물품의 공동판매 및 홍보를 통해 수익성 증진에도 기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정보교류 및 소통 촉진을 위한 정기 행사 개최 지원
 - 지자체 단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뿐만 정보 교환 및 노하우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연대의식 강화 및 상호 학습의 기회 제공 필요(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지역 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 홍보 및 확산

- 우수 사례(best practice)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포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산 유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 담당 가능
 -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사회적 경제 영역 전 분야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혁신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가치 및 사회혁신성의 전파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요구를 창출시키고 직접 실험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성과 창출과 지역사회 혁신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 가능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윤리적·사회적 소비시장 형성, 사회적 투자 유치, 기부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민간시장과의 연계 확대 모색

-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의 확대로 대변되는 대중의 정체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
- 이에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의 상품 및 활동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장터 사업도 추진하고는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일례로 별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하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한켠에 사회적 경제 매대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실정
-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 구조의 이해를 돕는 컨설팅과 홈쇼핑, 마트, 소셜 커머스, 국내외 온라인

마켓, 백화점 등의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는 MD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민간시장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소영 외, 2019)

-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거래하며 유통채널에 맞춤 공급하고, 시장개척과 제품개발 및 개선에도 관여하는 종합상사형 ‘소셜 벤더¹⁾’가 등장하고 있어, 소셜 벤더를 통한 거래 활성화 모색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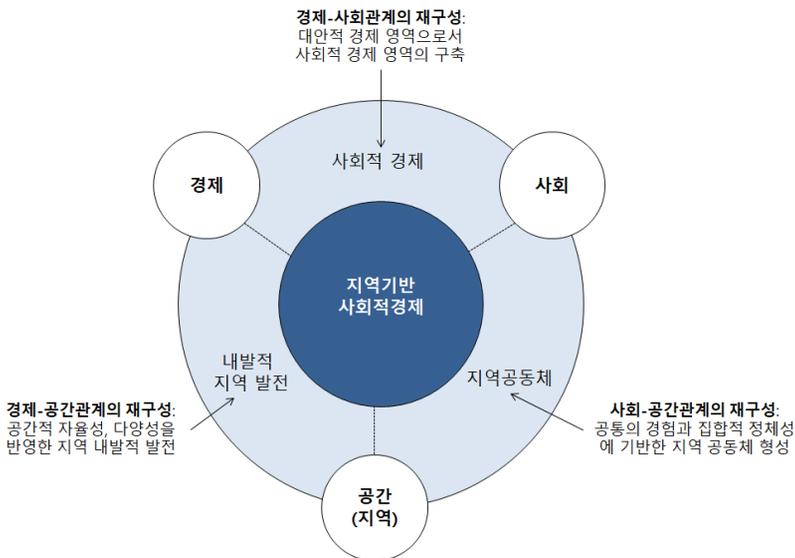
□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내발적 발전 견인

- 기존 지역발전 시스템 하에서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체제 하에서 공간 개발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강함
 -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중심 지역발전 전략은 이후 지역별 격차에 의한 공간적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지역단위 공동체의 해체와 지역의 내발전 발전 역량의 상실로 귀결
- 이에 반해 201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논의는 경제와 사회 간 상생적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임
- 특히 사회적 경제는 상향적(bottom-up)이고 자조적(self-help)인 사회원리를 경제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임
 - 즉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자립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Robertson, 1989; 정규호, 2008 재인용)
- 이러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개념은 ‘지역’을 추상화된 경제적 공간(economic space)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life place)’로 재인식하고 이곳에서 경제적·사회적 대안을 찾아나갈 필요성을 강조(정규호, 2008)

1) 경주의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대구의 무한상사가 대표적인 종합상사형 소셜벤처임

- 즉 경제-사회-공간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견인(정규호, 2008)

[그림 5-1]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영역



자료: 정규호(2008:120)를 토대로 수정 및 재구성

□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 조성

-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인위적 양적 성장 모형을 탈피하여, 공존과 협력, 변혁적 혁신의 확산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장용석 외(2015)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진화과정을 ① 양적 성장 단계, ② 공존과 협력 단계, ③ 변환적 확산 단계로 구분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기업 주도에 의해 사회적 기업의 물리적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는 단계로 설명함
 - 정부 의존성이 높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생력이 미약한 생태계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독자적인 사회경제적 영역을 구축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팔목할만한 사회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단계임
 - 공존과 협력단계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공부문 및 시장 영역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이는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독자적인 생태계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함
- 장용석 외(2015)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하려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네 가지 차원에서 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적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창조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혁신역량의 구현(장용석 외, 2015)
 -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장용석 외, 2015)
 -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운영원칙을 조정·조율하는 거버넌스 운용(장용석 외, 2015)
 -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유입과 윤리적 소비의 확대에 대변되는 대중의 정체성 변화(장용석 외, 2015)
- 즉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강조한 사회적 경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
 - 정부, 지역사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사회적 기여, 지역사회 공헌 등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혁신 촉진

- 사회혁신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영역과 조직체가 호혜와 협력, 연대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김경희, 2013)
 - 사회적 경제의 기본 운영원리인 호혜란 다름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경제영역이 커질수록 개인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풍성해지고 사회혁신의 실행도 수월해진다는 특성
 - 즉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 사회혁신의 흐름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공진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발견과 학습, 참여와 협력이 그 핵심
 - 아무리 우수한 혁신 주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고 관계 맺고, 서로 배우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없다면 사회혁신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다양한 주체간 참여적 네트워크 및 협력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가능(김경희, 2013)
 - 버려진 지역자원의 혁신적 활용 가능: 지역의 버려진 자원과 지역의 취약계층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활용
 - 미해결 지역문제(일자리, 새로운 복지수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혁신적 해결 수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 변화: 민주적 참여, 협력과 연대의 훈련
- 즉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표준화되고 관료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의 수혜자나 일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문제를 발굴해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을 조직화하며, 직접 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혁신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주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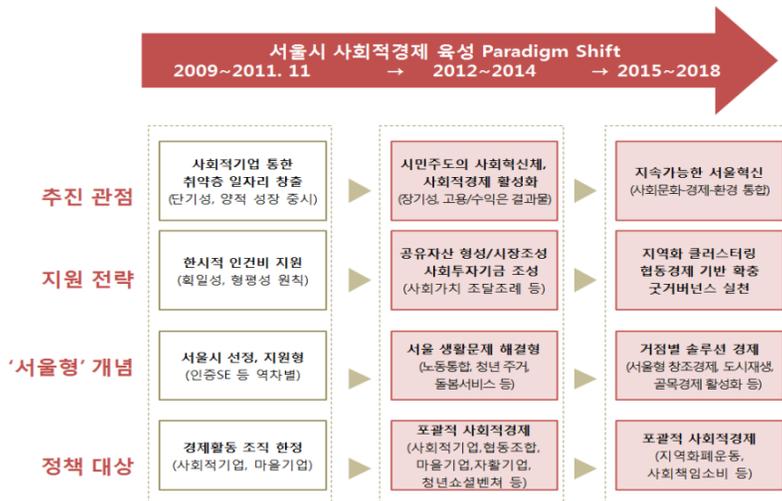
제2절 관리방안

1. 중앙의 역할

□ 생애주기형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

- 서울시의 생태계 중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개별 조직 단위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반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2011년부터 ‘생태계 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이러한 변화의 기반에는 호혜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사회적경제 역시 지속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 이러한 전제 하에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동경제 기반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내실화, 공유자산 형성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5-2] 예: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패러다임 변화



자료 : 고용노동부(2015)

[그림 5-3] 예: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과 목표



자료 : 고용노동부(2015)

○ 사회적경제의 자조 역량 강화

-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자조의 원리로 우선 해법을 찾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공공이 지원

○ 창업 단계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 기존의 인건비 중심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본질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성격으로 운영
- 서울시는 기존 사회적경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인건비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발전 단계별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구
- 사회적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인내자본과 장기적 기금(Patient & Long term Fund)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본조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기존 정책에서 94.8%를 차지하던 인건비 등 직접 지원액은 2012년 이후 54% 수준으로 비중이 급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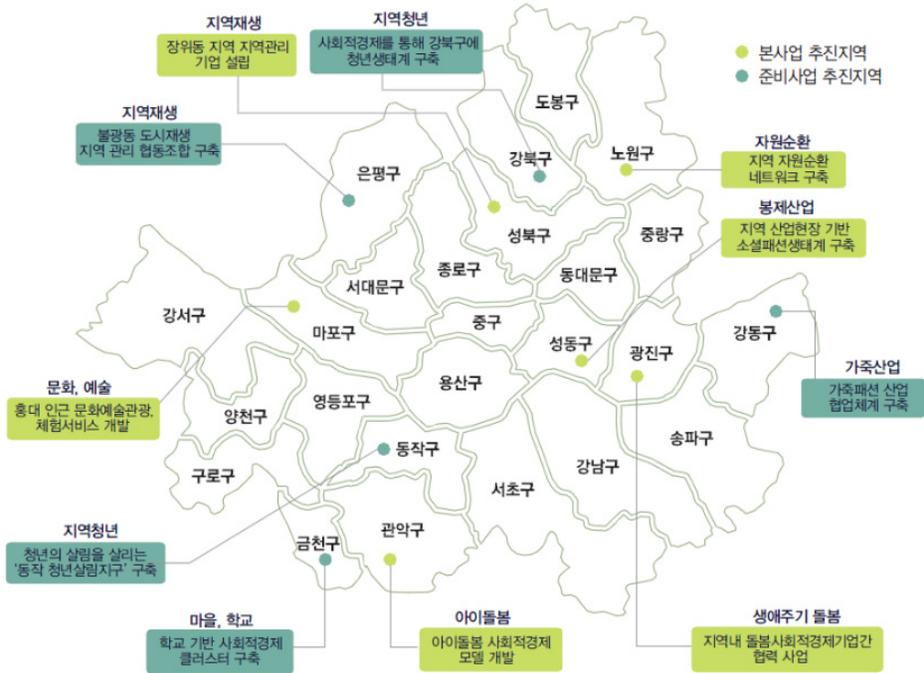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호적 시장 형성
 - 공공 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조달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및 우선 구매 목표제를 시행함
 -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함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고, 거버넌스에의 다양한 역할로서의 참여 기반 조성 추진

2. 민간의 역할

□ 시민대상 인력 네트워크 강화

- 시민 대상 수요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전략사업·전략지역 지정
 - 기존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 사회 서비스나 지역자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조직들의 사업계획 심사에만 치중하였음
 -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 : 서울시는 수요 조사 및 지역 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적 확충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및 추진 모델을 제시함
 -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 지자체 수준의 중간지원 조직들을 설립하여 정책 효과가 기초 지역 단위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함
 - 사회적경제 특구 : 상기한 전략사업과 전략지역 육성의 맥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업

[그림 5-4] 예: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 현황



자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 시민사회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강화
 - 인력양성을 위해 그간의 기초 창업교육을 넘어 인턴십·기술지원·국내외 기술전수 등이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내의 업종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협력 하에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구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
- 민-관 거버넌스, 민-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
 -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경제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선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민관, 민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추진 중

[그림 5-5] 예: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자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 거점역할 중간지원조직 지원

- 거버넌스 활성화는 단순히 의사결정 수준만이 아닌, 공동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를 위해 11구에 사회적경제 협력공간, 5곳의 거점공간들이 조성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개별적 생존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돕는 풀뿌리 중간지원조직 확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 단위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정책 집행 단위가 세밀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초 지자체, 각 지역 거점별로 사회적경제 관련 소규모 풀뿌리 중간지원조직들을 설립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력체계와 각 부문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구축 및 활용
 -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단위 마케팅, 특화된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 기초자치단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강화하고 교육 및 상담활동 중심의 역할에 집중
- 각 지역은 지자체와 지역별 민관위원회 및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개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운영 도모
 - 사회적경제기업간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형성된 국가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사회적경제를 자생적으로 구축한 해외 국가들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반영하여 지자체와의 관계 형성

□ **가치지향성 중심 사람중심 사회적가치 실현**

- ① 사람 중심의 경제, ② 사회혁신을 위한 경제 ③ 지속가능한 경제, ④ 지역기반의 경제를 설정 및 운영

[그림 5-7] 예 : 충남도 1기 사회적경제 계획의 비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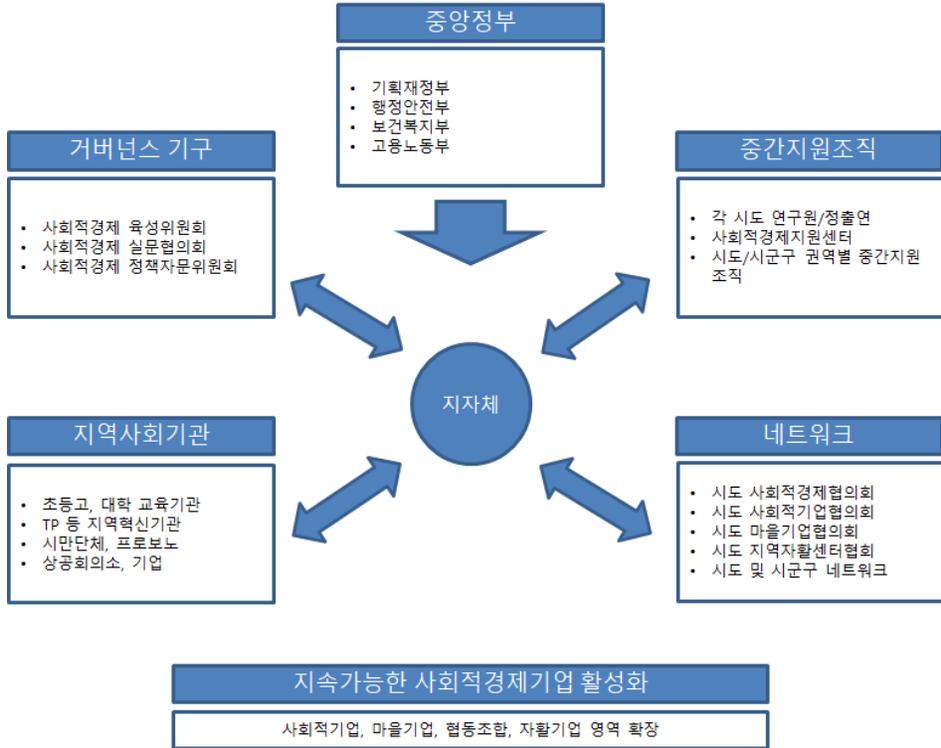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 계획(2017)

□ **일자리와 연계된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 일자리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회혁신형 인재 발굴·양성
 - 구체적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터를 위한 맞춤형 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연근무, 생활임금 도입 및 민주적 의사구조 확충 등을 제시
 - 영역간 융·복합을 통한 특화형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4차산업 혁명 대응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모델 발굴 추진

-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사회혁신 추구형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경력단절여성·시니어 등 계층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및 체계적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자신이 속한 세대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등 해결과제를 혁신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
- 지역 맞춤형 역동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과 충남형 열린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사회적금융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세부 목표로 제시
 - 사회적경제 혁신 플랫폼은 사회적경제 기업간 연대 및 공동생산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집적지를 가리키며, 지역 및 업종으로 특화가능성 높은 곳에 사회적경제 특구 신설·운영
 - 열린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지역혁신 자원연계 및 주체간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선진모델 공동연구·조사 등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운영·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체계 구축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 모금시스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기금 출범 및 운영

[그림 5-8]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구조



○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 등 4대 전략 정책 설정

- ①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 ② 시장조성 및 판매촉진, ③ 협력 시스템 구축, ④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연계해서 운영
- 시장조성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조성 및 확대, 공공 구매 활성화 추진 필요
-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조직·제도·평가 기반 구축 등을 추진

- 공공, 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네트워크 등 풍부한 사회적경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기관과 중앙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치 모델 구축 필요
 - 기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등 거버넌스 기구에 ‘사회적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참여형 협치 운영

- 고용노동부. (2015),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7), 협동조합을 이용한 일자리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
- 김기태. (2018), 사회적경제 시도별 특화방안 연구
- 김경희, & 반정호. (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 31-54
- 김봉화, & 김재호. (2010), 한국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전략. 파주: 한국학술정보
- 곽선화, 문홍석, 강승화, 김민형, 이나영, & 김미희. (2009). 2008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 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개요집: 노동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성공요인 분석연구, 전북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보도자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박승규. (2018), 문화균형교부세 도입의 경제적인 효과 및 법령개정 방안연구
- 박호정. (2009). 비용편익분석 이론과 기법의 최신 동향 연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보건복지부. (2008), 2008년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이규용, 이해춘, 이인재, 박성재, & 이지은. (2005).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등 성과분석 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노동연구원
- 이승규, & 라준영. (2009),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서울: (재)함께일하는재단
- 임혁백, 김철주, & 김윤태. (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모색

- 장원봉. (2009),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75, 47-73
- 정영호, 노대명, & 고숙자. (2008).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가치평가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보건사회연구, 25(1), 72-99
- 한국개발연구원. (2018), 사회적경제 중장기 발전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저출산 및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8), 사회적경제 시도별 특화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서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 행정안전부.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진단

부록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KRILA

--	--	--	--	--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기업 관련 정보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① 사회적 기업 ② 마을기업 ③ 자활기업 ④ 사회적협동조합
업종	① 환경·재활용 ② 문화·예술·관광·운동 ③ 급식·간식·반찬·도시락 ④ 간병가사·요양 ⑤ 교육 ⑥ 보육·돌봄 ⑦ 보건·의료·재활치료 ⑧ 산림보존 ⑨ 물품·식품 제조·가공·판매 ⑩ 청소·위생·경비 ⑪ 운송·택배 ⑫ 주거복지·건축·조경 ⑬ 기타()
사업장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및 만족도

Q1. 귀사의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2. 귀사는 현재 어떠한 발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힘들다
- ② 단기간 내(1~3년 내) 자립 가능하다
- ③ 이미 자립한 상태이다

Q3. 귀사가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지원 받은 정부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받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지원 받았는지 여부		지원 받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				
	① 예	② 아니요	① 전혀 만족 안함	② 별로 만족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 일자리 창출 인건비							
2) 전문인력 인건비							
3) 사업개발비							
4) 금융지원							
5) 사회보험 지원							
6)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7) 세제지원							
8) 경영컨설팅							
9) 직업능력 교육훈련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11) 판로개척							
12) 네트워크 구축							

Q4. 귀사의 현재 상황에서 향후 어떠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를 아래의 사항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약간 필요	⑤ 매우 필요
1) 일자리 창출 인건비					
2) 전문인력 인건비					
3) 사업개발비					
4) 금융지원					
5) 사회보험 지원					
6)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7) 세제지원					
8) 경영컨설팅					
9) 직업능력 교육훈련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11) 판로개척					
12) 네트워크 구축					

Q5. 귀사의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순위 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일자리 창출 인건비 | ② 전문인력 인건비 | ③ 사업개발비 |
| ④ 금융지원 | ⑤ 사회보험 지원 | ⑥ 시설비 및 운영비 대부 |
| ⑦ 세제지원 | ⑧ 경영컨설팅 | ⑨ 직업능력 교육훈련 |
| ⑩ 공공기관 우선구매 | ⑪ 판로개척 | ⑫ 네트워크 구축 |

Q6. 귀사가 올해(2020년) 설정한 사회공헌 활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사회공헌활동	목표 포함 여부		올해 목표
	① 포함	② 미포함	
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3) 사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공헌			
5) 기타			

Q7.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 미션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	성과 측정 지표
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유지	
3) 사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공헌	
5) 기타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